Weekly

공감

2009 07.22
No.21(통권 122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회 병목에 걸린 3508개 민생법안

중점기획 세계는 사이버전쟁 중

똑소리! 여름방학 초중고생 금융강좌 가이드

한·EU FTA 되면 뭐가 좋아지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한국 정치, 'demo'만 있고 'cracy'가 없다

이상우(서강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대한민국은 이제 환갑을 넘겼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아시아 48개국 중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민주정치체제는 완성됐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마비되고 국민은 어떤 정당도 믿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불법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혹평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에는 'demo'만 있고 'cracy'가 없다고 한다.

국민은 풍요한 대한민국, 민주적인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이라는 세 가지 꿈을 이루는 데 정치인과 정당들이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그들이 개인과 당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지탄받을 만하다. 제61회 제헌절을 맞이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2의 제헌을 모색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다. 시민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고 그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을 말한다. 국민 중에서 시민이 다수가 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순탄하게 작동하지만 시민이 소수일 때는 파행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민주주의의 선결요건이 된다. 더욱이 정치인과 정당 지도자들이 시민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잘 정비된 민주제도일지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정치인들부터 자기 성찰을 깊이 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를 지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질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 원칙이 모든 법과 규정의 제정, 그리고 질서 운영의 준거가 되는 근본규범(Grundnorm)이 될 때 우리는 그 체제를 민주체제라고 한다. 이 규범을 지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민주정신이고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질 때 성숙한 민주주의체제가 자리잡는다.

국가의 의사결정은 전문성,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은 그 권한을 전문가에게 선거를 통해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위임받은 전문가의 권한의 준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법을 어기고 직접 다양한 국민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핑계로 헌법질서를 어기는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민주질서는 허물어지고 대중영합주의라는 반민주정치로 전락한다.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국민의 뜻'을 내세우고 대중영합주의를 획책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이다. 정당은 민주질서를 부수는 대중선동(Demo) 대신 질서관리(Cracy)에 주력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헌법이고 이 헌법과 헌법에 근거한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어느 국민이 존중하겠는가. 정치인과 정당 지도자들은 법을 지키는 정치를 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07.22_No.21(통권 122호)

3508개 민생법안 국회에서 대기 중

7월 17일은 제61회 제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헌절은 우울한 생일이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감도는 여야 간의 전운(戰雲), 반복되는 점거 농성과 극단의 대치….
국회는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아이인 듯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생(民生)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담아봅니다.

기획특집

36

52

발행일 2009.7.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돕겠습니다"

혹시 내가 '깨진 유리창'?

●● 〈Weekly 공감〉 20호(7월 15일자)에 실린 '李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장학재단 설립' 기사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용인에서 여덟 살 딸아이와 다섯 살 아들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취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학재단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혹시 먼 훗날 지키기 힘든 약속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 고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_ jmh0705

"취임 이래 첫 약속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시장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보낸 대학생입니다.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기왕 좋은 의미로 출범시킨 장학재단, 깨끗한 관리로 그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대통령의 나머지 약속들이 지켜지는 과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디에나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_love20712(이미옥)

"세계 외신 어느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었지요. 대통령께서 재산 환원을 결정하시기까지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게다가 가난 속에서 자라 힘들게 모은 재산이라 쉽게 내놓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고 결단입니다. 청계장학재단이 '깨끗한 대통령'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대통령'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_ amilee222

●● 〈Weekly 공감〉 20호에 실린 '인터뷰-열 돌 맞은 하나원 최초 여성 원장 윤미량' 기사와 관련한 독자들의 격려와 공감 댓글을 소개합니다.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시각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_ 두루누리

"어떤 드라마를 통해 하나원이란 곳을 알게 된 기억이 납니다.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파이팅을 기원합니다."_ 필승불패에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독자가 대학등록금도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묻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소개합니다.

"올해 대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기 중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이죠. 방학이라 놀러도 가고 싶고, 부족한 학과 공부도 하고 싶지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이미 학자금 대출도 여러 번 받은 상태라 이자도 갚아나가야 하고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연 7퍼센트로 학생들이 부담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_한철훈

▶경기 불황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가정이 많아져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학자금 대출인데요, 대학생이면 별다른 담보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7퍼센트로 일반 대출에 비해 싼 편이지만 학생들이 부담하기에 적은 돈은 아니죠.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 출범과 함께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6% 내외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던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발족한 기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담당하던 학자금 대출 업무를 직접 맡습니다. 2학기부터는 은행에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꼭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studentloan.go.kr)에는 정부 각 부처의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뿐 아니라 민간 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정보도 얻을 수 있는 '학자금 SOS' 코너가 개설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2학기 학자금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7월 2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1.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 7월 17일.

4. 각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포괄해 부르는 용어.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OOO테러가 발생하면서 PC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하는 것. 또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 'OO법인'

8.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이나 관습, 행동 등을 말합니다. "찬란한 민족 문화 OO을 지켜가다."

10.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의 안건이나 조안. "비정규직법 등 하루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OOOO들이 쌓여 있는데, 국회가 파행을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세로

2.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장관쯤 되는 외관직. 조선시대에 와서는 병마OOO와 수군OOO로 나누어 각 주군을 관장했죠.

3.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 민의를 받들어 법률을 제정하며,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곳이죠.

5.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몇 번 개정됐는지를 나타내는 번호. 또는 한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른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르는 말. "내 PC를 가장 최신 OO으로 업그레이드했다."

7. 어떤 사건이나 법안 등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하죠. "미디어법 등 많은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OO 중이다."

9. 여럿을 통일하여 하나로 만든 안. '한글맞춤법OOO.'

〈Weekly 공감〉 19호(7월 8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방학 **2** 사교육 **4** 성우 **6** 학부모 **8** 교두보 **9** 행정

세로 **1** 방과후학교 **2** 사교성 **3** 육군 **5** 우측보행 **7** 모교

당첨자

김희경(대전 서구 갈마동)
박수향(서울 은평구 녹번동)
박철식(경남 창원시 반림동)
윤형희(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민정(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김우창 석좌교수, 좌우 극한대결에 대해 말하다

"중산층 많아야 사회는 안정성 갖는다"

우리는 지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사회에 살고 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아옹다옹 싸우기만 하는 현실을 벗어날 해법은 요원한 것일까. 김우창(72)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만나 이 시대에 대한 그의 진단을 들었다.

여야와 좌우가 왜 이리 극렬하게 대립한다고 보십니까. 집단적, 개인적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봐야죠.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해관계죠. 그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을 해야죠. 예를 들어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은 사회주의적 관점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선 주장은 많은데 '사실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주장하려면 우선 현실적으로 대안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자는데 그럼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대안이 뭐죠? 과거 조선시대의 '상소(上疏)' 문화에서 임금을 질타하는 문구를 보면 조선이 왕정체제였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저도 선비들의 기개와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문화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주장했으니까 그것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선 안 됩니다. '임금, 바르게 하시오'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지가 없어요.

오늘날의 갈등에도 그런 명분적 전통의 영향이 남아 있군요. 저는 지식인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식인의 역할은 사실적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능력에 따라 생각하고 연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면 지식인이 나라를 통치하지 왜 정치인이 합니까?

지난 6월 원로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들의 최근 시국선언에 부정적이신가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국민의 의사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칩니다. 저도 언론에 칼럼을 쓰고 의견을 내지만, 제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합니까? 다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여야와 좌우가 상호공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념적으로 좌우의 구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좌에게든 우에게든 대상으로서의 현실은 하나입니다. 현실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엔 (좌우를 벗어난) 다른 대안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싫든 좋든 좌우를 하나로 합치고 묶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사회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이념적으로 온건한 중도 성향의 국민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안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죠.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현실적 방안일 겁니다. 안정성은 현실 긍정적인, 보수적인 생각인데 어찌 보면 사람 사는 데 가장 근본적인 거죠.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철학적인 말씀 같은데 인간 삶에서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추상적으로는 죽는 게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를, 더 잘살기를 바라고 그런 전제 아래서는 삶의 안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전통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걸 '민생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에선 타협과 중도를 이야기하면 좌우 극단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나 '회색분자'로 몰아붙입니다. 사실 안정적인 삶이란 것 자체가 정치와의 거리를 말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의 삶이 정치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보통 사람들

은 안 그래요. 농사꾼들이 임금이 누군지 모르는 게 태평성대라는 고사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텐데요. 조선시대에도 1천명 정도의 지식인이 단합하면 국가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모든 이의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정치적 자산과 식견이 있고 그걸 정책화해낼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겸손함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한 건 변화가 너무 큰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급격히 변하니 다들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어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도 당위적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촛불시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국민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국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우려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시위대가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죠.

결국 결정은 제도권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논의를 다 포기한 상태여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직접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으시는군요. 직접민주주의는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만들 수는 없어요. '노(No)' 라고 하는 건 직접민주주의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럼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등의 적극적인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급진적인 해결책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합리성에 입각하라는 거죠. 합리성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걸 지속적인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합리성은 될 수 있으면 평화적이어야 하지만 평화적인 수단을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상적인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죠. 계속적인 노력이 저절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뭔가를 고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혁명적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합리적인 현실이 되려면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시장 체제' 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되, 부작용들을 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복지체제를 갖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느냐는 거죠. G

대담과 정리 · 김종혁(중앙일보 문화스포츠 에디터)

중앙일보

김우창 교수는

1937년 전남 함평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문명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를 거쳐 고려대 영문과 교수, 고려대 대학원장을 지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고 현재 이화여대 석좌교수다. 지난해 서울에서 첫 대회를 연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포럼' 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저서로 〈궁핍한 시대의 시인〉 〈심미적 이성의 탐구〉 〈시대의 흐름에 서서〉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 〈정의와 정의의 조건〉 등이 있다.

한·EU FTA 전격 체결

세계 최대 EU 시장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양측은 협상 시작 2년 2개월 만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어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자리 잡게 됐다.

7월 13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양측은 2년 2개월을 끌어왔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2007년 5월 양측이 첫 협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EU 교역관계에서는 농업 부문의 민감성이 한미 FTA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되어 신속한 타결이 전망됐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냉동 삼겹살 수입 등 몇 가지 쟁점 때문에 타결이 지연됐다.

지난 4월 초에 타결에 접근하는 듯했으나 관세 환급, 원산지 표기 방식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시 지연됐다. 그러던 중 올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회의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고, 마침내 7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총리가 한·EU FTA 협상의 합의 종료를 선언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한·EU FTA 협상 타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자리 잡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대외만방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넓힌 것은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해가려는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와인, 삼겹살 등 수입품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7월 7일 프랑스 농수산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09 한국 소믈리에 대회'.

한·EU 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5~7년에 걸쳐 대부분의 상품관세를 철폐하고, EU는 5년 내에 모든 상품관세를 철폐한다. 유럽의 관세 철폐로 한국 상품들은 EU 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 EU의 평균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상품은 관세 철폐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대(對)EU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수출의 증대는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게 되며 국내 생산의 증가는 고용 증대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FTA 협상 타결 이후 제도 개선,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도 예상된다. 특히 한·EU FTA의 관세 철폐 일정은 한미 FTA보다 더 빨라 단기적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미 FTA에 준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피해예상 산업에 대한 면밀한 후속대책 마련해야

한·EU FTA는 부품소재산업에서 대일본 의존도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상 부품소재에서 일본과 EU는 대체관계에 있어 한·EU FTA가 발효되면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하던 부품소재의 수입처가 EU쪽으로 상당부분 전환되고, 대일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에서 수입된 좀 더 싼 값의 부품소재를 활용하면 국내 제품의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 약화는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접근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일본 부품소재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동아DB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비자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FTA가 발효되면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럽의 질 좋은 낙농제품, 와인류, 삼겹살 등을 좀 더 싼값에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한·EU FTA는 한미 FTA의 비준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번 한·EU FTA 타결로 EU 업체들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하는 미국업계를 자극할 수 있어 결국 한미 FTA 비준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과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가 한·EU FTA 타결을 선언하고 있다.

물론 한·EU FTA가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유럽산 냉동 삼겹살이 대거 수입되면 국내 삼겹살 생산이 위축될 수 있고, 기계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럽산 고급승용차, 명품 등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 EU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같은 분야에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새로운 도전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간다면 더 넓은 시장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EU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그 후속대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 그 산업 종사자들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EU의 상품들이 시장지배자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이 적정한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활용해 FTA 타결에 타른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우리가 EU라는 거대시장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장을 EU 측에도 열어줘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간다면 미국이나 EU를 넘어 더 넓은 시장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G

글 · 성한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창준 前 미 하원의원 –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대담

"한미 FTA, 강력한 파트너십 다질 것"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요즘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준비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7월 13일 워싱턴 백악관 옆 17번가에 자리한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눴다.

한국경제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왼쪽)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대담.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이보다 앞서 타결된 한국과 미국 간 FTA 비준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론 커크 USTR 대표는 한미 FTA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FTA의 상호 이익을 잘 인식하고 있다. 또 일부 부문이 공정한 경쟁 토대(level the playing field)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업계에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을, 의회에서는 비관세 무역장벽(NTB)에 대한 우려가 많다. 우리는 이들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review), 한국 측에 이런 우려를 어떻게 표명할지 신중히 연구하고 있다.

또한 업계, 노동조합,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완벽해야 한다. 정책 검토가 끝나면 우리 의견을 정리한 최종 결과를 한국 측에 제시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연간 70만 대 수입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7천 대 수입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아주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명확한 일정을 제시할 순 없다.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논의할 것이다. 현재로선 언제 검토를 완료할지, 언제 의회에 검토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없이 한국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싶어 한다.

의회 민주당 일부에서는 미국이 향후 15년간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퍼센트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한국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량에 더 얹어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을 추가로 늘려주면 그 특정한 대수만큼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 전임 부시 대통령 때인 2007년 3월 초 한미 FTA가 타결되기 전 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관련 의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그 제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도 관련 제안을 검토 대상의 일부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자동차 노조는 노골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해왔다. 제너럴모터스(GM)가 파산보호를 벗어났고,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반대 태도가 변하지는 않았나. 빅3 업체와 얘기해보니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으며, GM은 중립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자동차 부문을 다시 다뤄야 한다는 것처럼 언급했다. 이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원문을 수정한다는 의미인가. 재협상과 원문 수정 여부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미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재협상(renegotiate)이나 원문을 수정(reopen)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재협상, 원문 수정이 필요 없는 제안을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마도 추가(addition)할 수 있는 것 말이다.

기존 협정문의 주요 틀을 건드리지 않는 협상을 말하는가. 부속합의서(addendum)와 같은 방식을 말하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쇠고기 추가 협상 때처럼 말인가. 그렇다.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이 해마다 1백억~1백20억 달러 늘어나고, 수출은 1백억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치는 관세 축소를 반영한 것이다. 비관세 장벽이 모두 사라지면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경향이 있고, 언론은 그런 비판을 보도하기 좋아하는 것 같다.

한미 FTA는 제조품은 물론 법률,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는 쪽도 서비스업계다. FTA 조항은 한국이 관련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미국 업계가 방해받지 않고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한국은 서비스시장을 강력히 규제하고 시장 문을 걸어 잠그다시피 했다.

한국은 파나마, 콜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FTA를 체결했다. 상황에 따라 두 국가보다 한국을 먼저 비준할 가능성은 없나. 행정부는 현재 3개국과의 FTA를 리뷰하고 있다. 내가 한국을 담당하듯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담당하는 실무자도 같은 처지에서 각각의 FTA가 의회에서 처리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NAFTA 체결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원의원이던 당시 나는 NAFTA에 반대했으나 지지로 돌아섰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가.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원했음에도 NAFTA의 의회 비준은 아주 어려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입법 어젠다(agenda)가 많다. FTA는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국내적인 이슈부터 먼저 해결하면 무역 문제도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NAFTA 비준 당시에 비해 지금의 의회 분위기는 훨씬 역동적이고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미국 의회보다 먼저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할 경우 재협상 논란을 없앨 수 있고, 미국 의회에도 조속히 한미 FTA를 비준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언제 비준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 달렸다. 한국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최근 한미 FTA를 처리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미국은 미국 내의 정책 방향과 독립적인 판단,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미국 의회가 현실적으로 올해는 비준 표결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동의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협상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과학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한국이 가까운 시간 내 일정한 시점에 편안하게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바란다.

앞으로 양국 관계를 전망한다면. 최선을 다해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한미 FTA 정책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 질질 끌지 않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FTA는 그런 관계와 동맹을 훨씬 강력하게 증진시킬 것이다. G

글 · 김홍열(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동아DB

여성의 치밀함과 유연함, 남성 못지않은 담력을 가진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지난 20여 년간 통상 협상가로 활약해 왔다. 특히 동양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협정 등 여러 협상에 참여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는 김종훈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와 맞상대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주고받아 화제가 됐다.

동아DB

김창준(71)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1992년 한국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손꼽힌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미국 내 500대 설계회사로 키워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한국인 이민자로서 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편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실리기도 했다. 2006년부터 미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 한국판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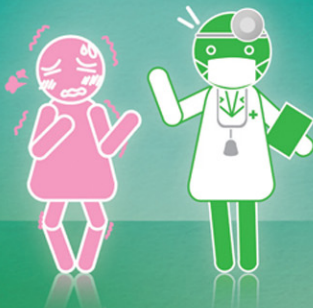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일러스트 · 이우정

법안 담은 민생트럭 국회에서 엎어지다

7월 17일은 제61회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제헌절은 우울한 생일이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감도는
여야 간의 전운(戰雲), 반복되는 점거 농성과 극단의 대치…. 우리의 헌법이 회갑을 넘기는 동안
국회는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아이인 듯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헌절 즈음에 바라본 국회, 민생(民生)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담아봅니다.

조영철 기자

제헌절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대치 중

'개점휴업' 18대 국회를 일하게 하라

출발부터 삐걱거리던 18대 국회가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 대한 여야 동시점거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5월 개원 이래 공전(空轉)과 농성으로 점철된 18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마저 파행시키고 있다.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 포인트' 본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집행부가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해 하루 일정의 본회의에 합의함으로써 6월 임시국회 회기 들어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산회 선언을 한 뒤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미디어관계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점거 대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을 넘기며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고 한나라당 역시 함께 밤을 지새우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본회의장 동시점거에 들어갔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점거 농성을 하기로 한 것은 국회 본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의 '최후 관문'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 회의 진행을 곧바로 막기 위해 잠시라도 본회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역시 그럴 경우에 대비해 본회의장에 남은 것이다. 양당은 7월 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퇴장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으나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당초 일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은 6월 26일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는 7월 15일 열린 한나절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을 뿐 산적한 민생현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상당수 법률안은 제출된 뒤 잠자고 있다.

7월 15일 국회사무처의 '기간별 의안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수(5천1백41건)는 17대 국회의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7배나 많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친 법안 처리율은 3분의 1(32퍼센트)에 그쳤다. 17대 같은 기간 처리율(47퍼센트)과 비교해 15퍼센트 포인트가량 낮다.

'국회 역할 불만족' 80퍼센트… 위기의 국회

지난해 4·9 총선을 통해 선출된 18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으나 첫 등원부터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못했다. 법적으로 임기 시작 1주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개원식조차 열지 않아 국회의장단 선출도 못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해놓고도 한 달도 더 지난 8월 26일에야 첫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까스로 원 구성에 성공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쳐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열린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이 저지하기 위해 전기톱, 소화전 등을 동원하며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6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의 길을 걸었다. 민주당은 6월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숙식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첫 단추부터 삐뚤어진 18대 국회는 본회의장 여야 동시점거라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파행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회 각계에서도 불만과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6월 18일과 19일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용기간 2년'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들은 6월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의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0일 18대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월급날에 1인당 9백1만2천6백20원이 지급될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는 국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파행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회 각계에서도 불만과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일 18대 국회의원들의 첫 번째 월급날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는 국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한 달간 한길리서치가 국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80퍼센트가 불만을 나타낸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8.1퍼센트에 불과했다.

한길리서치는 "지금 우리 국민의 정치만족도는 위험 수위"라고 분석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할 것이며,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철 기자
여야 양당 동시점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

그럼에도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85.6퍼센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8.5퍼센트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현재의 '회기국회'의 대안으로 제시된 '상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72.1퍼센트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2퍼센트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18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주장이 상시국회 제도다. 연중 국회를 열어놓고 선거나 휴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건 없는 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가철 등 일정 기간만 국회가 쉴 수 있도록 휴회기를 정하는 것이 상시국회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백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뉜다.

상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개회 자체가 볼모가 되는 구태가 개선되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론 회기국회도 정쟁이 발생했을 때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회기 국회의 '냉각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수(數)의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당은 수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삼가야 합니다. 야당은 수의 부족을 사생결단식 정치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_정기국회 개회사의 한 구절

상시국회는 지난 1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가 '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공식 제안하며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심 교수는 "개선안 중 핵심은 상시국회제도"라며 "현재 회기를 정해 의회를 여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상시국회제도는 국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는 현재 경제적으로 지극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이뤄져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가 2004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미국이 11.20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1.96건으로 우리 국회의원의 '입법 생산성'이 미국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물론 의회제도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기업처럼 효율성만을 놓고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다 정당을 초월한 교차투표가 불가능한 비민주적 정당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이번 6월 마지막 날 5백50만 비정규직들의 통한의 눈물 속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묶어둔 일은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신파'들도 분명 존재한다. 지난 겨울 임시국회가 사실상 폐회한 가운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월 14일 상임위 중 유일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정상화 방안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경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 공전이 계속될 때에도 상임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연구활동을 하는 의원연구단체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대 국회 당시 도입 첫 해인 1994년 18개였던 의원연구단체는 14대 국회 마지막 연도인 1996년에는 22개, 15대 국회 때는 최고 45개, 16대 국회에서는 최고 51개, 17대 국회 때는 최고 64개가 결성됐고 18대 국회에서도 5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송영길(민주당)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 김

상희(민주당)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이 최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면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곳이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조금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주의란 효율성보다 좀 더 상위의 개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향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사안"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일은 뒷전인 채 싸우느라 여념이 없고, 이제는 국회 안에서까지 투쟁을 선포하는 형국"이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큰 다짐을 하고 들어온 초선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만큼은 대화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는 화급한 비정규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8선 의원이자 14, 16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 전 의장은 "개헌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도 못하는 국회가 무슨 개헌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화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수(數)의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당은 수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삼가야 합니다. 야당은 수의 부족을 사생결단식 정치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국회 개회사의 한 구절이다. 파행 국회 해결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불안과 좌절, 상처받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의 문을 여는 국회'는 바로 이 개회사를 공유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G

글 · 박경아 기자

1월… 3월… 6월… 7월… 점거농성

바람 잘 날 없는 로텐더홀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사당 안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로텐더 홀이다.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일컫는 로텐더홀은 18대 국회 들어 모두 세 차례 각 당 의원들의 점거농성 장소가 됐다. 로텐더홀이란 이름은 서양 건축에서 둥근 천장이 있는 원형 홀이나 원형 건물을 의미하는 '로턴다(rotunda)'에서 비롯됐는데 정작 국회 내 로텐더홀은 연한 황갈색 대리석 벽에 둘러싸인 사각형 공간이다.

국회사무처 의회경호과에 따르면 첫 번째 점거농성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법 등 이른바 'MB법안' 저지를 내세우며 열흘간 점거농성을 벌였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로텐더홀과 복도의 불법 부착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성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 1월 3일 국회사무처가 경위와 방호원 1백20여 명을 동원해 '질서 회복 조치'를 취하던 중 극렬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첫 번째 로텐더홀 점거농성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자진 해산, 종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함께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해산 명분이 없다"고 농성 해제를 거부해 결국 국회사무처가 1월 5일 새벽 농성 중이던 의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로텐더홀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점거농성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인 3월 1일 '하루짜리' 농성이다. 당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3월 3일)을 이틀 앞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자 해당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자진 해산했다.

세 번째 농성은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벌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연합 농성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를 소집하자 '단독국회 저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전격 등원을 결정하며 해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 역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여당 단독국회 개회반대 등을 이유로 나란히 점거농성을 벌였다.

동아DB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 의안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민생법안 산더미… 서민 한숨 쌓인다

여야 싸움에 3천5백여 법안 통과 미지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백점 만점에 겨우 40.7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민생법안 통과는 뒤로 미룬 채 파행과 공방을 계속하는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 신음하는 서민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7일 동안 이자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백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가 받은 돈은 1백50만원에 불과했다(월 이자 1백15퍼센트, 연 이자 1천3백90퍼센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 사례다. 9천7백66건의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 사례 가운데 이자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를 본 1천5백1건을 분석한 결과 92.8퍼센트인 1천3백93건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 금리는 연 1백 퍼센트 이상이 전체의 80.9퍼센트였으며, 심지어 1천 퍼센트를 초과하는 사례도 10.1퍼센트나 되어 피해자 대부분이 고금리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49퍼센트, 미등록 사채업자는 연 30퍼센트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리 제한이 등록 대부업체 60퍼센트, 미등록 대부업자 40퍼센트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 49퍼센트와 30퍼센트로 시행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은 수시로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

나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14건이나 올라와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추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60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낮추고, 연체 이자율 상한선을 약정 이자율의 50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낸 개정안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를 낮춰 등록을 유도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알면서도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나날이 커져가는 영세업자 고충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이뿐이 아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정수호(가명 · 52) 씨는 손님이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면 짜증이 난다고 말한다. 1만원 이하라도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를 빼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씨는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DB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 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18건이나 국회에 올라와 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상공인에 한해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률이 대형 가맹점 수준인 2퍼센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가맹점별 수수료율 차별을 금하고 영세업체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며,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소상공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1백50만명이나 되는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계류 대표적 민생법안

7월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3천5백40개. 이 가운데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는 미디어법에 몰두,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외에도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고용보험법',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고등교육법',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임금을 삭감한 후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임금 삭감 이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상희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백80일 이상에서 1백2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4개 슈퍼슈퍼마켓(SSM · 3백~1천평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중소상점 2백26곳을 대상으로 SSM 입점 영향과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1.2퍼센트가 '경영난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을 못 버틴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유통업 양극화와 중소상인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11건이나 올라와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이 협소한 중소 시군구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

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시종 민주당 의원 등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시도지사가 영업 품목과 영업 시간, 의무 휴업일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등록금 기준액과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학생은 졸업 후에 갚아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천만원이 넘는 학비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민생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이나 KT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출해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으로 서비스별 할인요금 출시도 가능해진다.

한나라당 '서민 살리기 5대 법안'

한편 민생법안은 미뤄둔 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민생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 미래 준비 3개 분야로 나누어 44개 법안을 '긴급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으로 꼽았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조업체 등의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호와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현수 한나라당 정책국장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

민주당도 사회적 관심과 서민 및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7개 분야 16개 법안을 '민주당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으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건

동아DB

여야 의원들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계류 주요 민생법안

상임위	법안명	주요 내용
정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조업 등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규제장치 마련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인하,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경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소매 점포 밀집지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품목, 영업 시간 규제, 중소유통업 보호
법제사법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 처벌 조항 강화
기획재정	조세특례제한법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한시적 조세 감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 이용약관인가제 개선
보건복지가족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틀니 보험 급여 확대
교육과학기술	고등교육법	등록금 인상 제한,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

강보험법’ ‘고등교육법’ 등이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추고, 연체 이자율 상한선을 약정 이자율의 50퍼센트로 제한하며, 이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한 내용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세금을 2010년 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이 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70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 대해 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진짜 서민정당인지 확실히 하겠다”며 “민생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 민생법안 이원화 필요”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법안들이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각 정당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문난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쟁점법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전체가 마비되고 시급한 민생법안마저 묶이는 것은 문제”라며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본분이며 의무이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여당은 협상을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야당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의사 일정을 고려하고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국회의원 법안 표결 불참률 30%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도 불참
공동 발의 법안 기권 · 반대표 던지기도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주요 입법과정인 법안 표결 처리에 다수가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들이 의안 표결에 참여한 비율은 68.74퍼센트에 불과했다. 90퍼센트 이상 참여한 의원은 고작 53명이며, 80퍼센트 이상 참여한 의원도 65명에 불과했다. 반면 참여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의원은 1백1명이었으며, 40퍼센트가 안 되는 의원도 30명이나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참여한 의원은 겨우 1백82명이었으며, 예산안 관련 총 16건의 의안에 대한 표결 참여율은 64.6퍼센트에 불과했다. 또 비싼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삭발시위를 하는 등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2009년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에도 1백91명의 의원만이 참여하고 1백3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심지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18대 국회 의원입법 1백5건의 표결 중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이 24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동 발의한 법안에 기권한 경우도 10여 건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어처구니없는 경우마저 있었다.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 발의 건수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기준이 되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집단의 눈치 보기, 정당 얽매임과 추궁 회피, 직무유기와 무책임 등을 국회의원들이 표결 과정에 불참하는 이유로 꼽았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의안에 대한 표결 참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많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앞으로는 자신이 제출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 찬반 이유나 기권 이유 등을 반드시 밝혀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삶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32대 긴급 민생법안 선정… 법안 통과 총력

동아DB

한나라당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 제출된 '32대 긴급 민생법안'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선다.

한나라당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미래 준비'를 위한 '32대(大) 긴급 민생법안'을 선정했다. 이들 긴급 민생법안은 비정규직법, 아동복지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법안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7월 13일 한나라당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표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미래 준비 등 3개 분야의 우선 처리법안 목록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친 뒤 '32대 긴급 민생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긴급 민생법안은 △민생 안정 13개 법안 △경제 살리기 6개 법안 △미래 준비 13개 법안이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초 '30대 긴급 민생법안'이 발표됐으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민생 안정 부문에 '전염병 관련 법안(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검역법)'이 추가되고 미래 준비 부문에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추가되어 '32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 중에서도 민생 안정 부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으로 선정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32대 긴급 민생법안

구 분	법안명	상임위원회
민생 안정 13개	비정규직 관련 법안 3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환경노동위
	고용보험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식경제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무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대부업법	정무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제사법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국토해양위
	아동복지법	보건복지가족위
	전염병 관련 법안 3건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검역법)	〃
경제 살리기 6개	한미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 부수법안 등 4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무사법 개정안)	외교통상통일위, 기획재정위, 농림수산식품위
	미디어 관련 법안 4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해양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위
	산업입지 및 개발법	국토해양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무위
미래 준비 13개	공무원연금법	행정안전위
	목적세의 본세 통합 관련 법안 3건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육과학기술위
	초중등교육법	〃
	공공기관운영법	기획재정위
	수산업협동조합법	농림수산식품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특별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위
	수도법	환경노동위
	환경영향평가법	〃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교육과학기술위
	교통안전법	국토해양위

2009 하계 국내관광 활성화 공동캠페인 無더위 夏·夏·好·好

無더위 夏夏好好는 더운 여름,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국내여행을 통해 하!하!호!호!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 보내자는 국내관광 활성화 취지의 슬로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갯벌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시원한 휴양림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품고 있는 국립공원, 알뜰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내여행상품들과 시티투어, 편안한 철도여행과 신나는 캠핑카 체험 등 여름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회 파행에 어깨 무거운 김형오 국회의장

"양보와 포용의 리더십 절실해"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김형오 국회의장일 것이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감 때문이다. 김 의장으로부터 국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할 개헌 문제에 대해 들었다.

조영철 기자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며칠 동안 퍼붓던 장대비가 그치고 모처럼 밝은 여름 햇살이 국회 의사당을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기상도(氣象圖)는 여전히 폭풍전야다.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마음과 국민에 대한 죄스러움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토로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짙은 고뇌가 느껴졌다.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두 개 법안 때문에 국회 자체가 공전하는 폐습이 반복되고 있어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이 클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회는 한두 개의 쟁점법안 때문에 장기간 국회가 공전하는 아주 안 좋은 폐습이 생겼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3천5백 건 이상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금융지주회사법안, 공무원연금법안 등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법안들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운영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여당은 소수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포용의 리더십을, 야당은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열린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강경파가 여야를 주도하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야는 투쟁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의 뜻을 이어나가는 선의의 경쟁관계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현 18대 국회가 특히 문제가 많은 건가요. 사실 18대 국회가 생각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같은 기간의 17대 국회보다 훨씬 많은 6백56건의 법률안

을 처리했고 2009년도 예산안도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추경 또한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처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몇몇 안건의 대립 때문에 18대 국회 전체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아DB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3월 3일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농성을 풀고 등원한 것은 다행이지만 쟁점법안에 관한 여야 협상이 그리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야는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촌음을 아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또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당은 대화보다 '수(數)의 힘'으로 다수당의 위력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 또한 수의 열세를 '강경투쟁'으로 만회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여야 모두 자기주장을 1백 퍼센트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가 좌지우지되고 표류하는 상황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협상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됩니다.

여권에선 줄곧 핵심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 의장께서는 그동안 최대한 직권상정을 절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유부단하다, 좌고우면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어느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국회의장은 불편부당하게 여야를 조율하고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기본 책무입니다. 그게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일지라도 국회 수장으로서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직권상정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직권상정은 분명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권한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행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직권상정은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여야 간에 타협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 원리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직권상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 어떤 경우도 물리적 충돌이나 일방 강행처리 없이 여야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임기 후반 주요 과제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지요.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너무나 빠르게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헌법과 헌법환경 간의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담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은 그 운용의 묘와 상관없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국가, 위대한 지도자라면 결코 미래 투자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관련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지난해 9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헌법개정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셨고, 이홍구 전 총리도 고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헌법학계에서 최고 권위를 지니신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셨고 언론계, 법조계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당한 날을 잡아 '자문위원회 안'이 공식 발표될 겁니다.

이와 별도로 1백86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신 국회의원이 1백86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를 넘는 것은 물론 3분의 2 개헌선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저는 제헌절을 맞아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009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이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폭력 국회의원 엄중 처벌하고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폭력, 막말, 점거농성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계 전문가들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폭력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소환해야"

김 민 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인가? 여야가 서로 처지가 바뀌어본 경험이 있음에도 오로지 대립과 투쟁의 의회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국회를 개혁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특히 민의의 전당이자 의원 한 명 한 명이 신성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의 폭력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해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에는 국민이 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폭력 등을 행사한 의원에게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국민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의 근거와 요건, 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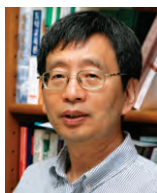
"징계위 실효 거두려면 외부인들로 구성해야"

이 재 교(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국회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경고, 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除名)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의한다(국회법 제162조).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 징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적이 없는 외부인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최종 결정은 본회 의결로 하므로 국회의 자율권이 손상되지 않으며, 설령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안이 상정된다는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므로 국회 내 폭력이 자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사법 절차에 따라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국회 사무처는 의무적으로 고소·고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사이에 '폭력 국회의원 퇴출(징역형 선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여론을 환기시켜 법원으로 하여금 폭력 국회의원을 엄벌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폭력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응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폭력 방지책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 보여야"

박 효 종(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우리 국회는 개혁돼야 한다. 제도적 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가 지녀야 할 품격과 관련된 행태적 개혁이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생각해보자. 이른바 국민들의 대표인 '선량(選良)'으로 이뤄진 국회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국민은 국회에 입법 권한을 위임했지만, 폭력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은 '월권(越權)'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국회가 자정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폭력 국회의원들을 스스로 솎아낼 수 없어 결국 검찰이 개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는 결코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또 폭력 국회의원을 국회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나서 시장에서 불량품을 '리콜'하듯 불량한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야 된다. 폭력으로 국회를 먹칠하고 한국 민주주의마저 부끄럽게 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불체포 특권 없애자”

김 정 호(자유기업원장)

법치국가의 기초는 모든 행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법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 마땅히 국가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불법적인 행동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폭력이다. 법치 개념이 등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사적인 폭력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사람에 대해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사용한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폭력이나 폭력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서도 태연하게 의원직을 수행해왔다. 그런 행동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의원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면 그에 합당한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은 독재자로부터의 탄압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를 불법을 자행하는 데 악용한다면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시민이 나서 유권자 주권운동 전개를”

박 용 진(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

경제 한파로 국민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슬러야 할 국회가 주요 법안을 놓고 무법천지 난장판 폭력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절망과 분노로 들끓는 건 당연하다. 민주주의 질서와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이 짓밟히는 이런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는가.

국회를 바로잡으려면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 미워하면서도 찍어주고, 찍지도 않으면서 온갖 원망과 한탄만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 범법자들을 가차 없이 단죄해야 한다. 중요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의 희생양이 되도록 좌시해선 안 된다.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유권자 주권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은 이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단호하고 엄정한 유권자가 돼야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 발전의 구심점도 찾을 수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시한 지나면 자동 상정” 민본21, 개혁법안 발의

동아DB

민본21의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최근 법안자동상정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자동상정제는 여야 간 합의 없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15일 또는 20일 경과 후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며 상임위 1백 80일과 본회의 60일 등 총 2백40일 안에 무조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자동상정제와 함께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조정위원회’ 설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폐지도 추진된다.

아울러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하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필리버스터(반대 토론)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이 역시 법안처리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뒀다. 또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이 끝난 후 표결하도록 했다.

매년 1월과 8월을 제외한 매월 1일 국회를 열도록 하는 ‘상시국회’와 상임위별로 시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실시하는 ‘상시국감’도 추진한다. 의장의 질서유지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의장의 두 차례 구두 경고에도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는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 의결로 3개월간 출석정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본21 국회정치개혁소위원회를 이끌어온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18대 국회 파행 일수가 개회 일수의 절반에 이르고, 과격하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 국민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이번에 낸 개정안은 파행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쟁점은 서로 논의해 풀어나가고,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개정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기자가 본 국회… 음지서 일하는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

안건 통과돼도 밤샘조 꾸려도 국회의사당 시계는 돌아간다

7월 1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의 휴대전화로 다급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짧은 문장이지만 내용은 간단치 않았다. '민주당 보좌진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로 집결한다는 소문 있음. 전원 비상대기할 것….' 이렇게 국회의 전운은 시작됐다.

입법전쟁의 서막이었다.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의 싸움은 없었다. 국회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했음에도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았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여야 의원 본회의장 동시점거 농성에 '코미디 국회'라는 조롱이 쏟아졌다. 여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성 작전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다. 본회의장 '밤샘조'가 꾸려졌고,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대치에 돌입했다. 대화와 타협은 온 데 간 데 없다. 불신이 만든 국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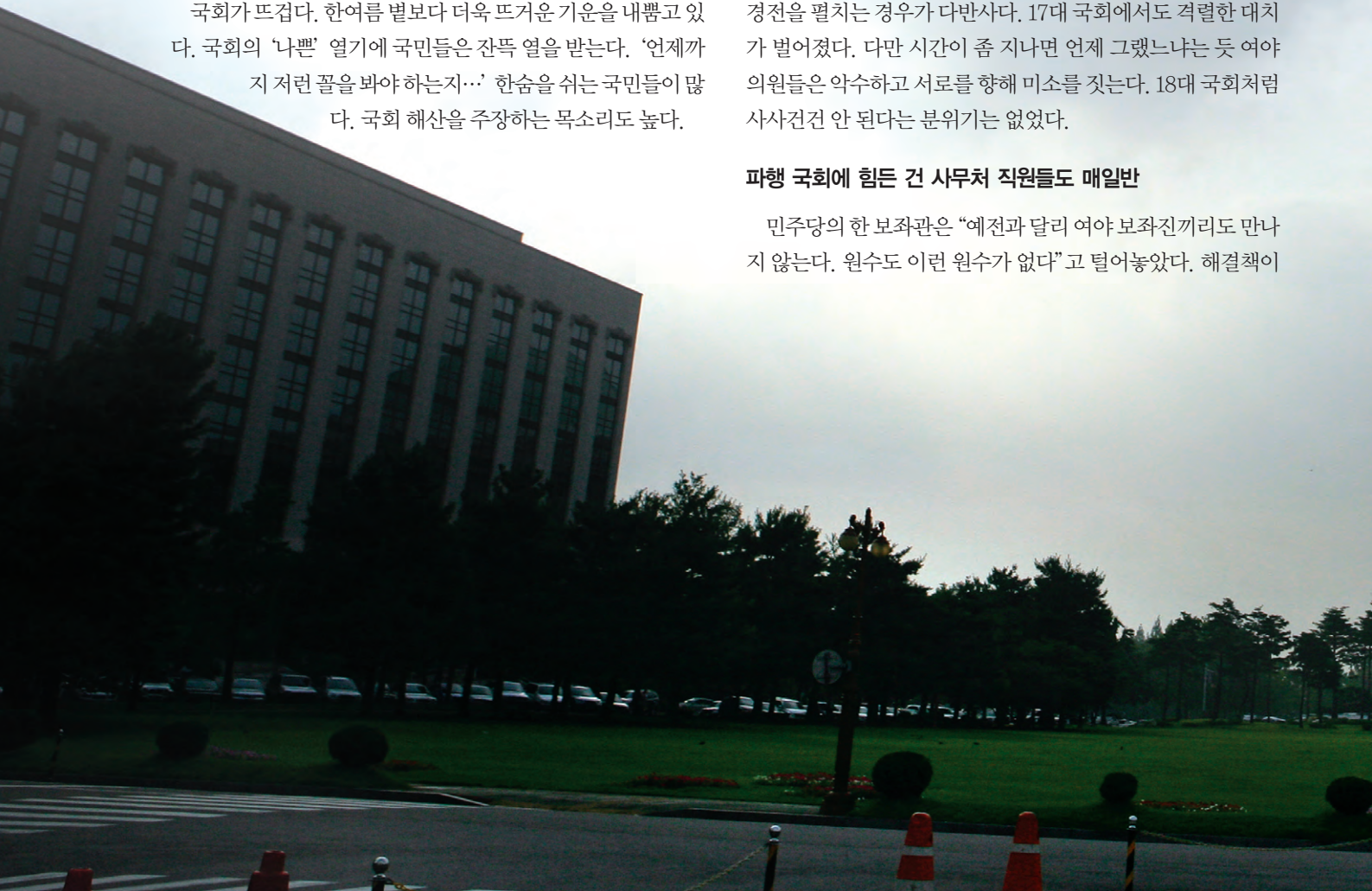
국회가 뜨겁다. 한여름 볕보다 더욱 뜨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다. 국회의 '나쁜' 열기에 국민들은 잔뜩 열을 받는다. '언제까지 저런 꼴을 봐야 하는지…' 한숨을 쉬는 국민들이 많다.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벌어진 입법전쟁. 전기톱과 해머의 등장. 민의의 전당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기'들은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대한민국 국회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셈이다. 올 7월, 입법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지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여야의 드잡이가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그는 "정치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못 믿는 분위기다.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원래 잘 싸운다.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17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여야 의원들은 악수하고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18대 국회처럼 사사건건 안 된다는 분위기는 없었다.

파행 국회에 힘든 건 사무처 직원들도 매일반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예전과 달리 여야 보좌진끼리도 만나지 않는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더욱 답답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포진한 '정론관'에도 포연이 자욱하다. 여야의 비방전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막말로 정치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살벌한' 국회를 놓고 국회의장에게 칼을 겨누기도 한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다. 한 여당 의원은 "1차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잘못이지만 국회의장의 책임도 크다. 국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일'을 한다. 또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일을 하도록 보좌진이 뒷받침한다. 정권 실세로 통하는 영남권의 한 의원은 매일 아침 5시면 눈을 뜬다. 조간신문을 살펴보고 7시 30분쯤 국회에 출근한다. 세미나와 포럼에 참석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준비한다. 시간이 잠시 비어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민원인들이 불시에 찾아와 하소연하기 일쑤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파행 국회에 힘들어한다. 사무처의 한 담당관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국민들이 국회를 좋은 시각으로 안 보고 있다. 난장판 국회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회에 들고 오는 민원은 풀어주기 힘든 일이 많다. 민원인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보좌진도 덩달아 바쁘다. "국회의원들이 물 위에 우아하게 떠다니는 오리라면 보좌진은 오리의 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의원들의 품위가 결정됩니다." 한 보좌관의 설명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8명(인턴 포함)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은 시간 싸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업무일지 수첩에 '분 단위'로 해야 할 일을 적어놓는 보좌관도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파행 국회에 힘들어한다. 사무처의 한 담당관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국민들이 국회를 좋은 시각으로 안 보고 있다. 난장판 국회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무처 직원들은 1천7백명이 넘는다. 국회 자체 방송국도 보유하고 있다.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형성된 인력과 조직이다.

"영화로 비유하면 국회의원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 배우이고, 사무처 직원들은 스태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사무처 한 고위간부의 설명이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으로 날마다 신경전이 벌어지는 요즘 가장 바쁜 부서는 의회경호과와 미디어담당실이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로텐더홀 농성 때 의회경호과 직원들은 3교대로 밤을 새우면서 대기했다. 본회의장 여야 동시점거 농성도 의회경호과 직원들을 바짝 긴장케 한다.

미디어담당실은 최근 들어 기자들의 방문이 부쩍 잦아지면서 쉴 틈이 없다. 미디어담당실의 한 직원은 "국회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 일시 취재를 신청하는 기자들이 많아졌다. 하루 평균 70~80명의 기자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국회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삭막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드넓은 잔디밭을 보유해 싱그러움을 전해준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도 없다. 국회 방문객들은 방문증만 받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관광객들도 많다.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폼을 잡고 활짝 웃는다. 아름다운 풍경에 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한 국회의사당이 지금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국회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묘책은 없는 것인가. G

글 · 조진범(영남일보 정치부 기자)

조영철 기자

영국의회는 비신사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응징'하고 정쟁 관계일지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문화를 다져놓았다.

'비폭력 실현' 英 의회의 힘

"의장 지팡이 던진 의원 3개월 당적 정지"

대한민국 헌정사가 서구에 비해 짧다 하여 국회 내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랜 세월 폭력적 갈등을 겪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폭력 의회'를 실현한 영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7월 17일로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61년이 됐다. 헌정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자의적 통치에서 법에 의한 통치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됨으로써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는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법은 한 사회의 옳음(정의)의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모든 공적·사적인 행위를 규제 혹은 처벌하면서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옳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주관적이며 가치관에 의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에 완전한 만장일치를 얻어내기란 아주 어렵다. 특히 정치가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가치관에 의한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 간의 무한갈등을 잠정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며 그것이 입법을 둘러싼 갈등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치적 갈등, 입법을 둘러싼 갈등의 또 다른 속성은 폭력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이룬 동시에 법을 통해 폭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래서 의회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갈등이 폭력화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장치들은 폭력을 배제하는 다양한 수단이지만 이는 결국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와 동조가 없으면 행사가 불가능한 수단들이다. 즉 폭력적으로 비폭력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비폭력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회는 이러한 장치들에 있어서 한국 국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영국 의사당에 들어가면 여야 의원이 앉는 벤치 앞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약속이다. 이런 선이 필요했던 이유는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워낙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 자칫 그 선을 넘게 되면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의회 역시 얼마든지 폭력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회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모독죄'를 두고 있다. 의회모독죄는 의원들의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상대 의원에게 폭력이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통해 의원들 간의 격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폭력'은 민주적 · 능률적 입법 방해꾼

또한 영국의회에서는 의원 간 토론에서 다른 의원을 지칭할 때는 직접 이름을 거명하는 대신 '존경하는 ㅇㅇ선거구 출신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다. 의장이 의원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것은 곧 징계 처분함을 뜻한다.

이러한 호칭을 통해 최소한 감정적 말싸움의 요소를 덜어 갈등이 폭력화하지 않고 건전한 토론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치들, 즉 폭력을 배제한 갈등의 표출을 돕는 장치들은 영국의회가 오랜 세월 격렬한 폭력적 갈등을 겪으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폭력을 배제하는 영국의회에 '큰' 폭력적 사건이 1980년대에 발생했다. 이는 한 노동당 의원이 '메이스(Mace · 영국 하원의장의 직위를 나타내는 긴 막대기)'를 테이블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일이다.

당시 집권당이던 영국 보수당은 인두세를 개정해 가구당 내던 세금을 집안에 사는 사람의 수대로 징수하도록 고쳤는데 이것이 너무 심하다 하여 다시 수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하원은 여야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때 야당이던 노동당의 도널드 브라운 의원은 흥분 끝에 의장석 앞까지 나가서 메이스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에 여야 간 총무회의에서는 브라운 의원의 사과문 낭독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브라운 의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변명을 앞세우자 의장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은 이제 열여덟 번째 의회를 경험하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 건전한 토론을 통한 입법은 불가능하다. 이젠 폭력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의회문화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다.

결국 브라운 의원이 사과문을 낭독했지만 말미에 자기변명을 늘어놓자 급기야 의장은 브라운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브라운 의원의 무례한 행동은 보수당은 물론 노동당 동료 의원들의 격분을 샀다. 메이스를 던지는 비신사적인 행동은 노동당의 체면을 크게 실추시켰다.

이 때문에 진행 중이던 인두세 개정토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노동당의 입지도 크게 손상됐고, 의회에서 쫓겨난 브라운 의원은 노동당 지도부로부터 20일간의 권한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20일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 역내에도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의원 특권 일체를 박탈당했다. 더 나아가 노동당은 그를 3개월간 노동당 소속 의원의 통제에서도 해제했다. 이는 3개월간 당 소속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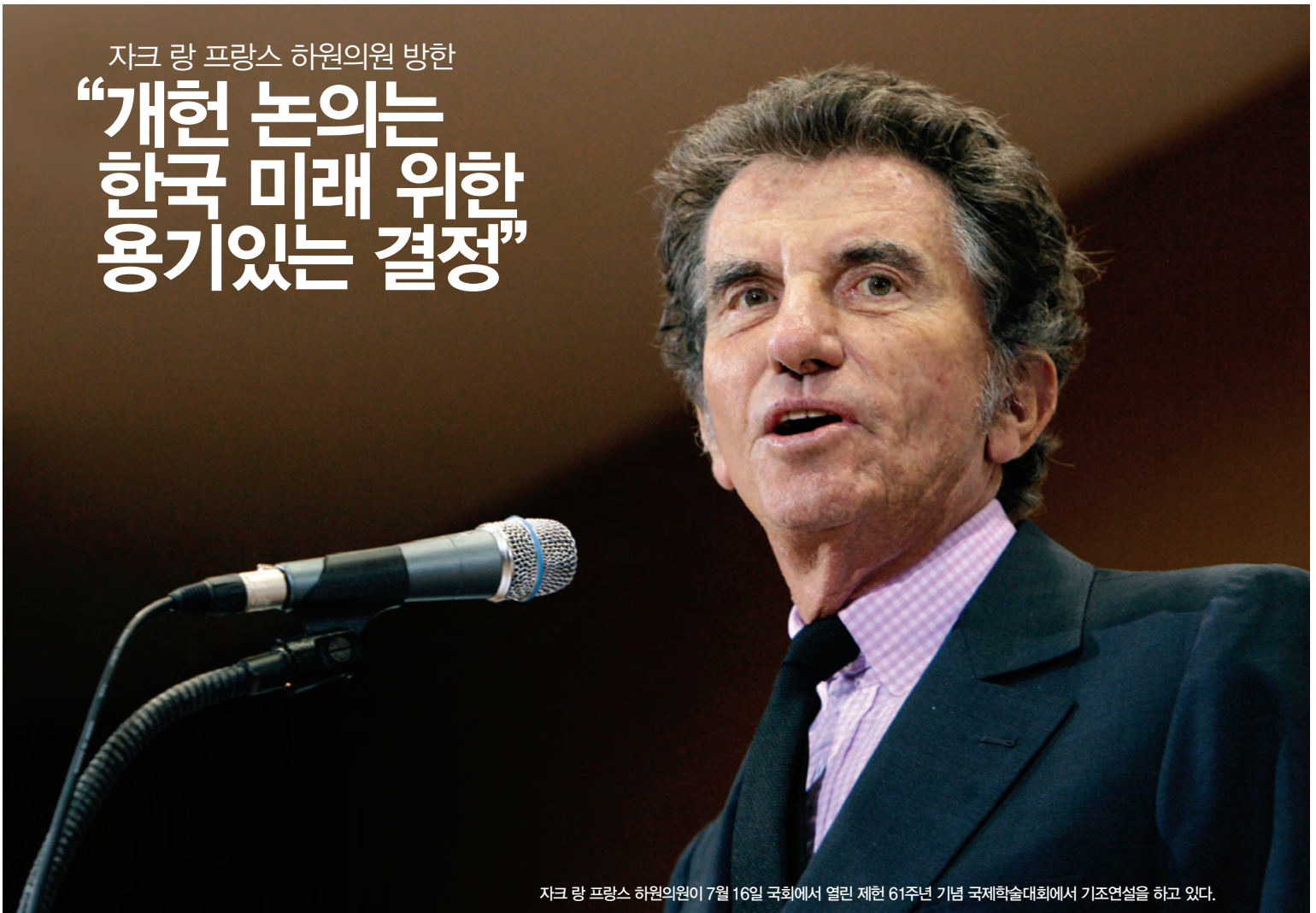
영국 의회정치의 수준과 품격을 한층 높인 이 사건은 의회 내 폭력사태에 대해 의장과 정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의회는 이처럼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의회 내의 활동에서 폭력을 배제하려고 노력해왔다.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폭력이 크든 작든 간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폭력을 근절했다. 영국의회의 이러한 노력의 밑바탕에는 비록 가치관을 달리하고 의회 내에서 정쟁을 벌이는 상대지만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기본 사상이 내재돼 있다.

한국은 이제 열여덟 번째 의회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짧은 헌정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폭력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젠 폭력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의회문화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 건전한 토론을 통한 입법은 불가능하다. 폭력은 결국 상대에 대한 예의의 부재에서 나온다. 한국 헌정사 61년을 돌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에서 출발하는 의회 운영이 결국 폭력 없는 의회,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 의회를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G

글 · 김민정(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자크 랑 프랑스 하원의원 방한

“개헌 논의는 한국 미래 위한 용기있는 결정”

자크 랑 프랑스 하원의원이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자크 랑(Jack Lang) 프랑스 하원의원이 제헌 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방한(訪韓)했다.
프랑스 사회당 6선 의원이며 지난해 프랑스 개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랑 의원은 개헌은 의회와 야당,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자크 랑(70) 하원의원은 사회당 소속 6선 의원으로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부 장관을 10년간 역임했고,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는 2년간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등 총 12년간 장관직을 지낸 프랑스 정계의 거물이다.

문화부 장관 시절 그는 이제는 유럽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산된 음악축제를 제안했으며 국가 예산 중 문화예산 1퍼센트를 연극 부문에 지원하는 등 문화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문화대통령’으로 불렸다.

랑 의원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9년 당시 프랑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스크린 쿼터 축소 여부가 문제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스크린 쿼터 지지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그는 줄곧 ‘문화적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이는 문학, 영화, 음악, 회화 등 문화상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므로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특별히 보호돼야 하며 통상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랑 의원은 또 언론 인터뷰 때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반환을 결정했으나 이후 프랑스의 입장 변화로 백지화됐다. 그는 이번 방한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외규장각 도서는 19세기 말 프랑스군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한국인의 역사 회복과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위해서도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랑 의원은 한국 방문이 처음이지만 한국의 건축가, 영화인, 작가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자유, 지성, 과학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룬 한강의 기적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한국인의 조직력, 공동체의식,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더 소중한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제라면 총리직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부와 의회의 균형이 이뤄집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 적당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랑 의원은 한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개헌이나 제헌은 전쟁이나 혁명 등 격변을 겪고 난 후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평상시에 개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헌법 개정이 있었다. 랑 의원은 당시 '제5공화국 제도의 현대화 및 재조정에 관한 검토 및 제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헌법 개정안 의결 때 소신에 따라 야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랑 의원은 7월 16일 국회에서 '글로벌시대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헌법질서'라는 주제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의 개헌 과정에서도 좌파와 우파의 대립 등 토론 열기가 뜨거웠고, 저도 힘겨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당에서는 유일하게 개헌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화에 동참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는 언제나 '네'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총리 이원화된 행정부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해 개정된 프랑스 헌법은 의회와 야당, 시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을 조정했으며, 공동발의 국민투표제도와 권리보호관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랑 의원은 하지만 프랑스 개정 헌법이 최선의 모델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된 행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시장이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프랑스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명확하고 단순한 제도라야 한다며, 본받을 만한 나라로 의원내각제 국가로는 독일을, 대통령제 국가로는 미국을 들었다.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총리가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제라면 총리직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부와 의회의 균형이 이뤄집니다. 대통령 임기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처럼 4년이 적당하며,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랑 의원은 어떤 나라든 의회와 야당,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방향이며, 행정부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면서도 개헌 논의는 실용적이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들은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데 익숙한 듯합니다. 이런 전통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와 야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학교수로도 재직한 법학자답게 랑 의원의 말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다. 원칙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5박6일 일정으로 방한한 랑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국정 현안과 문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웠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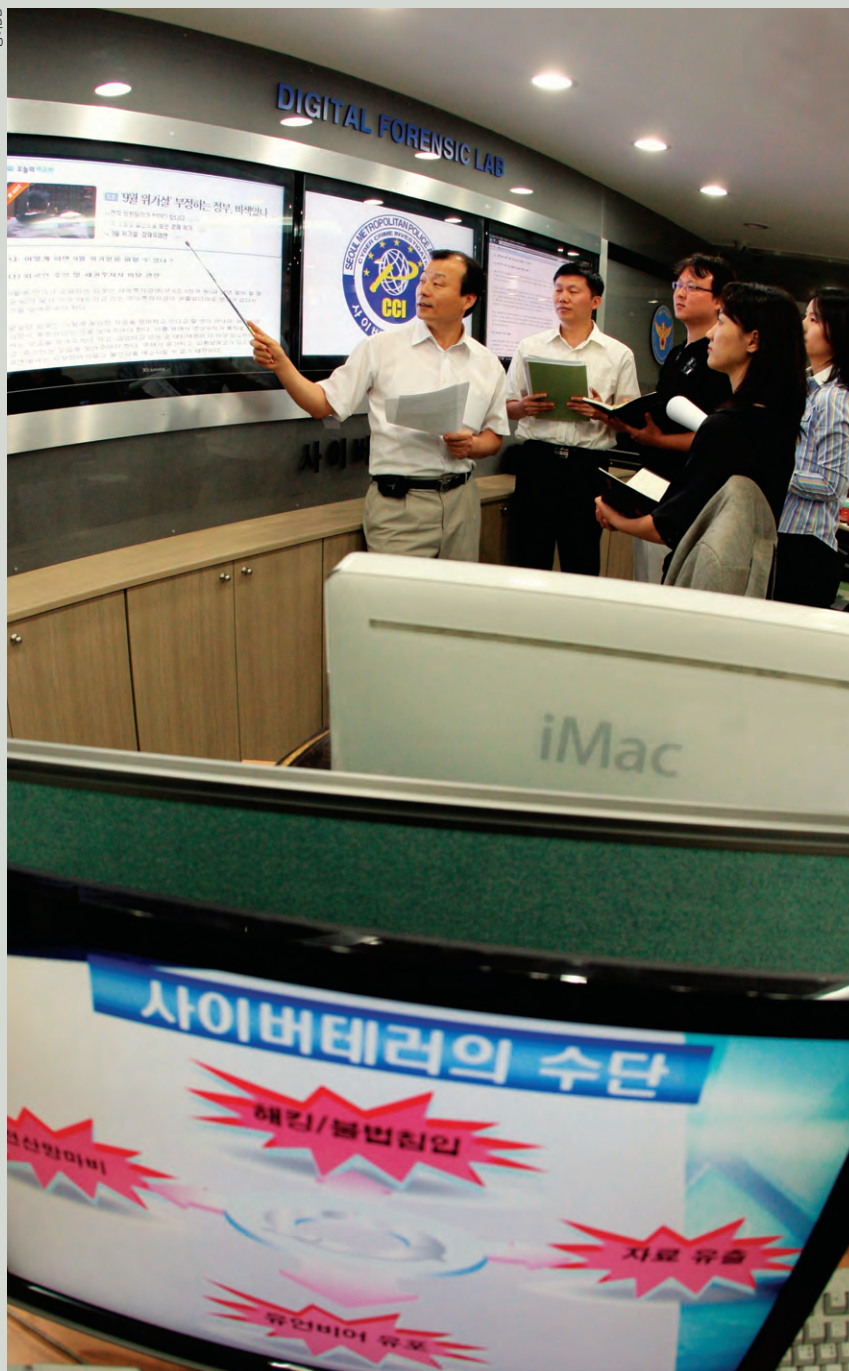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으로 제헌 6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자크 랑 프랑스 하원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선일보〉 대담에 참석했다. 랑 의원은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부 장관을 10년간 역임한 문화통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휴~ 다행히 피해 크지 않은 DDoS 사태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

정부와 언론사, 은행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한 악성 사이버 공격인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란'이 진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 일반 PC보유자들의 사이버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동아DB

이번 DDoS 사태는 예상보다 피해가 적었지만 미래의 사이버 대란 예방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7월 7일부터 준동한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7월 15일 오후 3시 DDoS 공격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내렸다.

7월 7일 오후 6시를 기해 청와대와 국회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사, 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미국 정부 사이트까지 동시에 공략해 사이버 장애를 일으켰던 신종 DDoS 공격은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감염된 인터넷주소(IP · Internet Protocol)를 통해 악성코드가 심어진 '좀비 PC'를 앞세운 이번 신종 DDoS 공격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보안업체 발 빠른 대처… 피해 줄여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이번 신종 DDoS 공격에 악용된 국내 IP는 전체 IP의 0.1퍼센트에 그친 7만7천8백75개라고 발표했다. 세계 인터넷 주소 체계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IPv4)'의 한국 내 숫자가 7천2백23만8천8백48개(2009년 4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IP 1천 개 중 하나' 꼴로 피해를 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감염된 IP로 '추정'해 발표한 7만7천8백75개와는 별도로, 실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ISP)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감염된 IP가 7만5천여 개에 그쳤다.

7월 9일 밤과 10일 새벽, DDoS 공격이 잦아든 무렵부터 발생한 좀비 PC의 자기 데이터 파괴 현상 비율은 더욱 낮아 0.009퍼센트에 머물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

계한 좀비 PC의 자기 데이터 파괴 현상은 7월 15일 오전 9시(마지막 공개)까지 1천4백 57건이었다. 이는 국내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1천5백87만7천3백95가구(2009년 5월 기준)의 0.01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은 숫자다.

이번 사태가 예상보다 적은 피해를 남긴 데는 DDoS용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연구소와 피씨그린, 알약, 하우리, 바이러스체이서 등 인터넷 보안업체들이 신속하게 무료백신을 보급하고 KISA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ISC)가 대형 공격을 유발하는 숙주 사이트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펼친 덕분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공격을 받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유출됐거나 은행거래 정보 등이 누출된 사례도 없었다. 궁극적으로 DDoS 공격이 인터넷에 연결된 좀비 PC로부터 한꺼번에 무차별 준동하는 데다 비교적 '간편한' 공격 도구로 자주 악용되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의 심각한 병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는 다소 야단스러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때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통신망을 감시 제어하거나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등 여러 핵심 기능을 하는 서버(Server)의 취약점을 파고들면서 일주일 가까이 인터넷이 마비되는 대형사고로 번졌지만, 이번에는 일반인들의 PC에서 빚어진 문제여서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았다는 해석이다. 국내 IP 가운데 0.1퍼센트 정도인 '감염 IP'로부터 준동하는 통신(트래픽)을 차단한 뒤 그 IP를 품은 좀비 PC를 치료하는 것으로 대응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DDoS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나 PC가 자기도 모르게 악성코드에 감염돼 공격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각자가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기 점검하고, 최신 보안패치(기능보완 덧붙임 파일)를 설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고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셈이다.

그동안 많은 추측을 자아냈던 이번 공격의 진원지는 첫 DDoS 공격이 시작된 뒤 시일이 꽤 지났으나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7월 7일부터 나흘간 집중된 DDoS 공격의 범인 찾기는 미로와 같다. 한때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들을 지휘하는 서버의 위치가 영국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다시 미국으로 드러났고, 이마저 최초 진원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향후 DDoS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PC가 자기도 모르게 악성코드에 감염돼 공격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각자가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기 점검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생활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옛 정보통신부는 2007년 '인터넷 유해 통신(트래픽) 정화체계'를 구축해 DDoS 공격을 사전에 막으려 했다.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과 함께 2008년에만 20억원을 들여 '유해 통신 정화체계(시스템)'를 KISA에 구축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세부계획도 세웠다.

'유해 트래픽 정화체계'는 'DDoS 하수도' 끝에 정화시설을 달아놓고 여과한 뒤 정상적인 통신(트래픽)만을 인터넷에 전송하는 체계다.

이번 DDoS 공격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DDoS 공격을 방어할 공공기관용 정보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2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DDoS 공격을 막을 만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 가능한 예비비와 관련 예산을 확인 중이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 등 행정기관별로 DDoS 공격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갖출 태세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DDoS 공격과 같은 대형 사이버 공격에 맞서 대응할 총괄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 정보보호 업무를 누가, 어디까지 주관할지'가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한편 사이버공격 민관 공동대응을 위해 올 6월 창립된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 순천향대 교수)는 7월 16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7·7 DDoS 대란과 관련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업은 기업별로 각자 대응했는데도 초기 대응에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보안전문가들은 이번 7·7 DDoS 대란과 관련해 이와 같이 지적하고 정보보호 인력양성의 중요성, 실력 있는 해킹·보안 인력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제안했다. G

글 · 이은용(전자신문 뉴스속보팀 기자)

동아DB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만들어 사이버 대란 막는다

연합

올해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해킹대회인 코드게이트 2009 참가자들. 각국의 해커들은 사이버전쟁의 첨병이 되고 있다.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계기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사이버 대란 대비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적성국의 전산망을 마비시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력 못지않은 위력을 지닌다.

DDoS

전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유용하다는 점에서 각국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수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평상시 해킹 등을 통해 상대국의 군사 및 기업 정보를 빼내는 데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를 빼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기관을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킬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대형은행 한 곳이 공격당할 경우 세계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9·11테러보다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군사 정보를 빼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미국 정부 전산망에 대한 공격은 전년보다 40퍼센트 증가한 5천4백88건에 달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해커가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35의 기밀자료를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사이버 전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이버 전력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는 정부 내에 산재한 보안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자를 백악관에 두기로 했고, 사이버 보안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 사이버 보안 예산은 5년간 1백70억 달러(약 21조7천2백6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오는 10월에는 사이버사령부를 설립해 전면적으로 사이버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사이버 방어뿐 아니라 공격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기관이 컴퓨터칩에 비밀리에 악성코드를 심어 적국 정보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 미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온라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가상의 미래 인터넷을 개발 중이다. 금융, 통신, 전력, 교통 등에 대한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계 각국 사이버테러 훈련 돌입

미국은 2006년부터 국토안보부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기업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이버대테러훈련인 '사이버스톰'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실시된 두 번째 훈련에는 영국 등 4개국도 참가했다.

사이버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을 가장 크게 위협할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1985년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해 정보전을 연구해왔고, 이후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와 반(反)해커부대, 전자전부대 등을 창설했다. 전자전부대 등에는 미국 유학생 출신 등 전문가들이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외국 기관의 자료를 해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중국은 '홍커'라는 1백만명 정도의 민간 해커들이 해커부대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2001년 미 백악관 웹사이트를 마비시킨 것도 이들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인 '정보보호사령부(가칭)'를 내년 1월 창설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사령부는 육해공군과 기무사령부의 컴퓨터위기대응센터(CERT)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실제 사이버전쟁도 벌어졌다. 러시아는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그루지야의 컴퓨터 통신망을 집중 공격해 이들 국가의 주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망을 마비시켰다.

올해 초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벌어질 당시 아랍권 해커 집단은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 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7·7 DDoS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 남북 간의 사이버전쟁 구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으로 대남, 대미 첩보를 수집하고 전산망을 교란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기술정찰조'를 확대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로, 군 컴퓨터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무는 국내 군사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망에 침투해 비밀자료를 해킹하거나 유사시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이다.

국내에서도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실제 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퇴치하는 임무를 총괄하는 사이버사령부인 '정보보호사령부(가칭)'를 내년 1월 창설하기로 했다. 당초 2012년 창설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창설을 앞당겼다. 정보보호사령부는 육해공군과 기무사령부의 컴퓨터위기대응센터(CERT)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보안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테러에 정부와 공동 대응할 '사이버예비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번 사태에서 맹활약한 보안업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시스템 통합(SI)업계와 금융업계도 사이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국내 보안업계는 현재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이상희 전 의원이 1996년 제기한 '10만 해커 양병론'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군 시스템을 바꿔 전자 군복무제를 도입,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사이버부대를 창설하자는 주장이다. G

글 · 이광빈(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 기자)

동아DB

다른 나라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전쟁은 실제 전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다.

이명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ISC) 본부장이 DDoS 공격에 대처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이명수 본부장

"바이러스는 트로이 목마처럼 침투한다"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사이버 방어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ISC). 이번 DDoS 공격은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악성코드 공격에 대비해 24시간 사이버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KISC의 이명수 본부장을 만났다.

"이번 신종 DDoS 공격은 일단락됐습니다. 게다가 안철수, 하우리, 바이러스체이서, 알약 등 인터넷 보안업체들이 신종 DDoS용 무료백신을 보급하고 있어 영향력이 큰 추가 공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맞서 며칠간 '사이버전쟁'을 치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KISC) 이명수(52) 본부장은 7월 16일 한숨 돌리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7월 7일 오후 7시경 DDoS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KISC 전 직원 45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악성코드 분석, 대내외 정보 수집과 DDoS를 퍼뜨린 '숙주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차단하느라 며칠 밤을 새우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7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DDoS 공격과 하드디스크 손상이 맞물리면서 '피 말리는' 한 주가 됐다고 한다.

그는 "그간 가장 우려했던 점은 공격 대상 리스트가 업데이트되어 추가 공격이 벌어질 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악성코드가 어디서 시작해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영국 내 서버가 이번 공격의 진원지로 알려졌지만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습니다. 서버에 대한 조사는 현재 경찰과 검찰 등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DDoS 공격 이후 가장 큰 고비는 'DDoS 공격이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된 시점'이었다. 이 본부장은 "다행히 DDoS 공격 후 KISC의 해킹 관련 서비스전화인 118번에 신고된 하드디스크 손상 사례는 처음 우려와 달리 1천4백여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이 주요 정부기관, 언론사, 금융권 등과 미국의 정부 사이트 등으로 돼 있고, 공격행위 관련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특정 세력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기존의 DDoS 악성코드들은 게임 사이트나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을 공격 대상으로 해 금전을 요구하는 소규모 공격이 대부분이었다"며 "현재로서는 사회불안 야기 외에 뚜렷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번 DDoS 공격은 1차부터 3차까지의 공격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구성돼 있어 사전에 정교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DoS 사태 일단락… 보안의식 강화해야

이번 사이버테러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기존 악성코드들과는 다르다. 기존 DDoS 공격용 악성코드들은 공격 시작과 종료 등의 명령이 특정 서버로부터 전달돼 감염된 PC들이 동작하는 '중앙 통제형' 악성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악성코드는 공격 내용이 악성코드 안 설정파일에 기록돼 있어 명령을 내리는 서버 없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의 피동적인 DDoS 악성코드가 변태를 거듭해 마치 스스로 공격하는 '능동형' 악성코드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보기술(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일부의 지적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에 대한 징후를 해외에서는 인지했지만,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간 또는 침해사고대응조직 간 정보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물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신속한 대응체제로 가다듬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이버 안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역시 운영 중인 서버의 보안 강화에 한층 노력하고, 일반 사용자들도 자신의 PC가 해커에게 악용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사이버 피해 확산에 일조하는 일반 이용자 PC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백신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동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보안패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앞으로도 있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boho.or.kr)'를 통해 악성 DDoS 공격을 유도하는 '악성 봇' 감염 여부를 확인해둬야 한다. '보호나라' 상단 메뉴에서 'PC점검'을 클릭한 다음 '악성 봇 감염 서비스'를 찾아 자신의 PC가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센터는 국내 주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접속불량 혹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관찰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 담당자와 핫라인을 통해 원인파악에 들어갈 태세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옹성에 살고 있다 해도 부지불식간에 '트로이 목마'처럼 침투하는 악성코드에 빗장이 풀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하는 이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본부장은 KT 정보보호본부 정보보호기술담당 상무, KT텔레캅 연구소장, 기술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KISC 본부장을 맡아오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 개그맨 김대희

"가짜가 판치는 나라 '명품 대한민국' 될 수 없죠"

위조 상품을 싸게 구입하면 당장은 이익일지 몰라도 기업과 나라에 피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오게 된다.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대희 씨가 말하는 지식재산권을 꼭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개그맨 김대희입니다. 개그맨들은 사람들을 웃길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누군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 몰래 사용한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개그 아이디어뿐 아니라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작품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를 기꺼이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위조 상품 비교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진품과 이른바 '짝퉁'을 브랜드별로 비교해 놓은 전시회였죠. 저도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로서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위조 상품의 숫자가 어찌나 많고 정교한지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술, 의약품, 골프용품, 액세서리, 전자제품에 걸쳐 무려 2만여 점의 상품이 모여 있었답니다.

관세청 단속으로 불법 거래 줄어들어

먼저 위조 상품은 진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는 현대모비스, 롯데칠성,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샤넬, 나이키, 아디다스, 로렉스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국내외 62개 유명 브랜드가 참가했더라고요. 위조 상품이 근절됐으면 하는 기업들의 강한 바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위조 상품 때문에 줄어든 매출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위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그만큼 물건을 싸게 샀으니까 이익을 얻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나라에서 만든 공산품이나 문화상품은 뻔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왔다고 할 때 누군가 저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진품만 사용하는 나라는 문화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지킬수록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2006년부터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한중일 세 나라 관세청이 위조 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시행

관세청은 지난 5월 '위조 상품 비교 전시회'를 열고 핸드백(위), 시계(왼쪽 아래)의 진품과 이른바 '짝퉁'을 브랜드별로 비교 전시했다.

하고 있어요. 관세청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1백69개 회원국 중 지식재산권 보호 최우수국에 선정됐고, 지난 4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위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익을 얻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지킬수록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단속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백46건 9천3백44억원어치의 위조 상품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올해에도 4월까지 1백88건에 1천8백96억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상품들이 제일 많고, 시계와 핸드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위조 상품을 숨겨 공항을 통과하는 데 사용되는 대리석과 샌드백 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립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예술가의 공연·음반,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개그 아이디어도 당연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겠죠.

한국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意匠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말하기도 숨찬 많은 법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재산권이 다양하다는 얘기지요.

관세법 253조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상표권과 저작권입니다. 특히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관세청에 등록사항을 신고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권자는 대부분 외국의 유명 상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알짜배기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알려진 우리 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중국 제품들이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지식재산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만의 독창성이 살아 있는 더 재미있는 개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위조 상품 불법 거래를 알게 되었다면, 국번 없이 125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G

정리 · 김희연 객원기자

안내 · 관세청(www.customs.go.kr)
위조 상품 불법 거래 및 밀수 신고 · (국번 없이) 125

녹색교통혁명 선언 한국철도시설공단

6조9백억원 집행해 11만명 고용 창출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미래 녹색교통혁명의 기수를 자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 KR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경부고속철도 언양고가 모습(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친환경 운송수단이자 에너지 및 수송 효율성이 높은 철도운송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2020 KR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전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은 물론 기후친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경제, 사회,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도로수송보다 더 효율적인 철도수송 분담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15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97.8퍼센트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친환경 운송수단이자 에너지 및 수송 효율성이 높은 철도운송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6월 2일 '2020 KR 미래 비전'을 선포한 배경이다.

공단이 새롭게 구축한 미래 비전은 '철도의 미래가치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단의 핵심역량인 철도 건설 및 사업 관리 역량을 토대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2020년까지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의 미래 비전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다. 첫째, 공단의 설립 목적에 충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비전이 철도 엔지니어링과 사업 관리 등 핵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왔다면, 새로운 비전에서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9개의 미래 사업모델 분석을 통해 매출과 수익, 자산규모 면에서 발전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9개의 미래 사업모델은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는 물론 남북철도와 경량전철, 해외철도, 철도자산개발, 철도물류시설, 연구개발과 정보교육 등을 아우르고 있다.

우수 인턴에 입사추천서… 청년 취업난 해소에 한몫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적기(適期)"라며 "공단이 미래 경영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선제적으로 타개하고 세계적인 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단은 9개의 미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철도 총연장을 5천 킬로미터로 확충하고 △신사업을 통해 연간 수익을 3천억원 창출하며 △한국철도 품질을 국제 수준 3위로 끌어올리고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겠다는 4대 비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철도 미래가치 증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신성장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및 사회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4대 경영 목표를 수립했다. 공단은 미래 비전 선포식

직후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와 책임경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장과 임원, 소속장 간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단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공단은 철도 건설사업으로 올 한 해 6조9백87억원을 집행해 약 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만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만 4조1천3백82억원(연간 예산의 67.9퍼센트)을 투입함으로써 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6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경기 악화와 고용 부진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KR청년인턴제를 통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공단은 "인턴 근무를 통해 장차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기별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인턴 근무자에 대해서는 입사추천서와 인턴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 경험이 풍부한 3, 4급 직원을 멘터로 지정하는 멘터링제를 통해 인턴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고 실무경험도 전수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3월 96명의 인턴을 선발한 데 이어, 5월에도 27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G

글 · 구자홍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철도 CO_2 육상교통의 1% 불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미래 경영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선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등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상 교통 가운데 도로가 97.7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하지만 철도는 1.1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래사회는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등 삶의 질이 중시됩니다. 우리나라도 고유가시대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대중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형인 교통정책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녹색철도망 구축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은 경부고속철도 광석고가.

한국은행 어린이 경제마을 홈페이지의 경제 플래시 '선샤인 랜드'는 경제와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자산관리가 뭐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나요?'

똑소리 나는 '금융과외' 받아볼까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교육 사이트나 경제교실에 참여하면 누구라도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학생 서지윤(14) 양은 이번 여름방학 때 '21일간 경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한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에서 하루에 한 강좌씩 21일 동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보며 돈과 경제를 공부하는 여행이다.

최근 지윤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홈페이지를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의 경우 7월 중순 현재 회원 수가 10만명을 넘었으며, 그중에서 초등학생이 약 44퍼센트, 중고등학생이 27퍼센트 정도 된다.

아이들이 올린 질문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주식은 얼마어치부터 살 수 있나요?' '자산관리가 뭐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나요?' 등 이 사이트의 '경제지식 나누기' 코너에는 돈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대한 것부터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경제 상식까지 예사롭지 않은 질문들이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제교실도 인기가 높다. 한국은행 부설 화폐금융박물관(museum.bok.or.kr)에도 부모와 함께 '경제 공부'를 하러 나선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화폐금융박물관에서 경제강좌를 진행하는 한국은행 하경희 과장은 "참가자가 많아 학기 중 쉬는 토요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반을 운영한다"고 이야기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금융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금융교육이 신용대란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다.

이처럼 어린 나이부터 금융 및 경제 공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반가운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윤우 연구원은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위기 보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국내 어린이 금융교육의 선구자로 꼽히는 박철 국민은행 연구

소 연구위원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금융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청소년기부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금융교육이 신용대란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아이들 대상 경제교육은 경제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사이트를 활용하면 집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사회나 경제 과목을 보충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한국은행 어린이 경제마을 & 청소년 경제나라

한국은행은 2006년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 경제마을', 중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경제나라'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대학생과 성인 대상의 '경제세계'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경제를 다루는 사회 과목과 같은 교과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도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의 경제게임 화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메뉴는 경제게임이다. 세계여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는 '세계 경제여행', 단계별로 퀴즈를 풀어나가는 '경제퀴즈왕', 가상으로 소비·투자 등 금융활동 미션을 수행해나가는 '경제 라이프 시뮬레이션', 다양한 금융상품을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해보면서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모의투자' 등 어린이용 16종, 청소년용 14종의 경제게임이 있고 게임 수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의 경제강좌로는 한국은행 부설 화폐금융박물관이 개최하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 청소년 경제 캠프, 토요 경제 강좌가 있다. 올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과 고등학생 대상의 청소년 경제캠프는 신청이 마감됐으나, 매주 또는 격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경제강좌는 박물관을 방문해 안내 데스크에 예약하면 참가할 수 있다.

안내 · bokeducation.or.kr

금융감독원 재미있는 금융길라잡이 금융교실

금융감독원은 '금융문맹 없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금융교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금융학교 메뉴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금융 상식을 배울 수 있고, 4백 40여 개의 금융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대상 돈 이야기, 신용의 중요성 등이 애니메이션 자료로 제공된다.

아이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금융지식마을 놀이터. 금융퀴즈를 풀어보거나 용돈기입장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종자돈 만들기'에서는 매달 저축액과 이자율을 입력하면 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별 만기지급액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어 저축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권할 만하다. 또 책마을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금융이야기〉, 〈만화로 보는 생활금융〉 등을 전자책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안내 · edu.fss.or.kr

한국개발연구원 클릭 경제교육

한국개발연구원은 2005년 12월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장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에 개최되는 하루짜리 시장경제교실은 방학 중 인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장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개방화와 국제경제 등 전문적인 내용과 미래의 직업세계, 신용관리, 경제논리와 글쓰기 등 실용적인 내용이 함께 소개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운영하는 '클릭 경제교육' 사이트는 주로 중고교 사회, 경제 과목 교과 수업에 도움을 주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질문 있어요'는 학생들이 사회나 경제 과목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교사나 전문가가 꼼꼼하게 답변해주는 코너로 2004년 개설 이래 약 2천 개의 질문이 등록된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다.

좀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클릭 경제교육' 잡지를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유명 경제학자 인터뷰, 기사 속 경제이론, 교과서 속 통계 등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경제이론과 시사 이슈를 고루 다룬다. G

글 · 최은숙 객원기자

안내 · click.kdi.re.kr

한국개발연구원이 방학 때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시장경제교실'.

기부금 공제 한도 20%로 확대 아시나요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내년부터는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소식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 기부문화 확산에 탄력을 주는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동아DB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동전모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집에서 돼지저금통을 가져와 동전을 한데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이 자선단체나 장학재단 등 일반 공익기관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법 개정(2007년)에 따라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내년에는 지금보다 5퍼센트 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다. 법인의 기부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기부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백 퍼센트(개인), 50퍼센트(법인)까지도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기획재정부 최영전 사무관은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데 대해 "소액, 다수, 개인의 기부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해당 공익법인에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사회복지단체, 장학재단 등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개인의 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기부금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해 산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금액을 기준 삼아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순차 계산해 소득공제를 한다.

소득금액이 3천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원, 국제 유니세프에 20만원, 교회 헌금 2백만원을 기부한 회사원 박 모 씨의 예를 들어보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박 씨는 2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소액 · 개인 기부 지원책… 기부문화 탄력

국제 유니세프에 낸 20만원은 특례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의 공제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퍼센트다. 따라서 2천9백80만원의 50퍼센트인 1천4백9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박 씨는 2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지정기부금이라 할 수 있는 교회 헌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 조합기부금)×10퍼센트가 공제한도다. 따라서 2천9백60만원(3천만원-20만원-20만원)의 10퍼센트인 2백96만원이 한도액이므로 박 씨의 교회 헌금 2백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 씨의 기부금 총 공제액은 2백40만원에 달한다.

이번 세제 혜택을 계기로 개개인의 아름다운 기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차선아(객원기자)

'전농동 우물 할머니' 노국자 씨의 나눔

"폐지 주워 아프리카에 우물 7개"

노국자 씨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헌 옷, 신문지, 빈 병 등을 주워 모은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고 있는 노 씨의 특별한 나눔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노국자(68·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씨가 우리 '애들'이라며 건넨 사진엔 까만 피부에 빨간 옷을 걸친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해 2월,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속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의 얼굴엔 따스한 미소가 가득했다.

먹고사는 데만 신경 쓰는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5년, 우연히 TV에서 아프리카 기아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였다. 참혹한 실상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곧바로 자동응답전화 ARS 기부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들을 위해 우물을 파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TV에서 열 살짜리 꼬마가 학교를 가고 싶다며 우는 거예요. 마을에 우물이 없어 자기 몸통보다 큰 물통을 머리에 인 채 물을 길으러 하루 네다섯 번씩 6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왕복하느라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거죠. 그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우물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삐뚤빼뚤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에 감동"

물을 마실 수 없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1960~85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강원도 삼척에서 가르쳤던 탄광촌 아이들이 떠올랐다. 물을 뜨러 다니느라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탄광촌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를 파는 데는 5백만~1천만원 정도가 들었다. 전업주부인 그가 감당하기엔 큰 금액이었다. 노 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생전 하지 않던 폐지 줍기를 하고, 화장품 전화판매를 했다. 신문지 1킬로그램을 모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4백원에 불과했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우물을 파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하얀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기뻤다.

노 씨의 아프리카 사랑에 주변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름 모를 독지가 할머니,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아프리카를 위해 써달라며 그에게 기부했다. 이런 기부금들이 모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2개, 우간다 3개, 케냐 1개, 짐바브웨 1개 총 7개의 우물을 만들었다.

지난 4년 동안 기부로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노 씨는 우간다 쿠미 마을에 사는 아촘

조영철 기자

노국자 씨는 "기부금을 모으느라 힘들고 고될 때도 있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 절로 힘이 난다"고 말한다.

(여·12)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제는 물 뜨러 가지 않아도 돼 고맙다며 언제 배웠는지 모를 한국어로 삐뚤빼뚤하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가진 것을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행복 바이러스, 기부문화가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G

글 · 김은지 객원기자

불편한 법령 2백14건 고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국가 달성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을 확대 개편, 지난해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법령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구호나 주장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에 걸맞은 사회 운영의 틀과 제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법제처는 법제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국가 달성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기존의 법령정비사업을 확대 개편, 지난해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천5백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큰 2백14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운전면허벌점 폐지' 등 이미 개정 완료된 법령도 68건에 달한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등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개정이 추진 중인 과제도 81건에 이른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창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법령 개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고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행정규칙의 개선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법률을 폐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징벌적 규정 줄이고 법치 바로 세우는 데 노력

흔히 법은 '벌(Bee)'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벌이 자신을 건드린 사람에게 침을 쏘듯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벌의 수단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벌이 꿀을 만들어내듯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은 불필요한 징벌적 규정은 줄여나가고, 국민 누구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치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Weekly 공감〉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개정 혹은 폐지한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을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G

글 · 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창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동아DB

4대강 살리기
제 15 화
유럽여행!
자전거여행!
글 이연수 그림 이호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이럴 때 안 가면 언제 가?
돈 모으자고 결혼도 미루면서 무슨 소리!

미라보 다리 아래 센느강은 흐르네. 밤도 오고 또 종도 울려라.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 비 그치면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시새워 벙그러질 고운….

센강!
낙동강!
도나우강!
영산강!

어떻게 된 새색시가 신혼여행 때부터 신랑한테 땀에 푹 전 모습이나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된 새신랑이 실속 없이 빚까지 내서 허세만 부리려 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빠직
빠직

이러다 결혼하기도 전에 파경 나겠다.
그러게.
휴
휴

자기야, 센강에는 문화의 향기가 있잖아.
우리 강에도 문화가 있다고! 우리 문화부터 알아야지!

우리나라 강가 가봐라. 강줄기 따라 순 비닐하우스와 쓰레기더미밖에 더 있어?
우리가 지금 당장 신혼여행 가는 거야? 3년 후라고!

3년 후면 시멘트로 덮여 있던 강변 주차장이나 강변 농지도 자연 녹지로 복원될 거야. 강가 따라 음악당이나 미술관도 지어질 테고, 방치됐던 문화재들도 복원한대.
음….

알았어! 내가 양보하지! 대신 앞으로 서방님을 하늘처럼 떠받들겠다고 약속!

뭐라고? 어디서 그런 전근대적인 발언을!
살려줘! 난 농담도 못 하냐?
손님들, 찻값은….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상시 공모

생활 속 불편함, 국민 소통으로 해결한다

이사 간 새 주소로 우편물이 배달될 수는 없을까? 초등학생 아이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순 없을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이제라도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로 제안해보자.

"마트에서 물건을 담는 1회용 비닐봉투를 달라 하면 50원씩 받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버리면 아깝기도 하고, 환경에도 나빠요. 마트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만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무심히 지나치는 일들이 많다. 이런 불편한 것들은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하면 훨씬 편리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면 어느 것이나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서 생활 속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특히 7월엔 사교육비 절감, 8월엔 에너지 절약 등 월별 테마를 정해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중간결산 차원에서 9월 말과 11월 말에 각각 50개씩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에 '생활공감-국민행복 실천대회'에서 최종 시상한다. 수상자 선정 기준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 중 해당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11월 15일 이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2010년 상반기에 심사한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로 뽑힌 국민에게는 대통령상(10명), 국무총리상(10명), 행정안전부 장관상(80명)과 함께 최고 2백만원에서 20만원씩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도 개선 절차 등을 거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실시 뒤 78건 '결실'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참여마당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 외에 일간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공감정책 공모는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됐다. 여기서 채택된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마트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 '경차택시 및 여성 전용택시 도입' 등 78건의 국민 정책아이디어는 현재 각 부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됐다. 국민과 정부 간의 쌍방향 정책소통이 결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1751, 1753, 1756, 1759)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월별 중점 공모 주제

시기	공모 대상
7월	사교육비 절감
8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10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육아·보육
11월	사회적 나눔사업

전화하는 순간 시작되는
1339 응급의료서비스!

AMBULANCE

C/P

언제나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 지금 1339를 저장해두세요
응급처치 방법에서 구급차출동까지,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응급의료서비스가 도와줍니다

전화하는 순간 시작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당신의 전화에 1339를 저장하세요!

집전화,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전문 응급처치 및 질병상담　　휴일, 야간 병원 및 약국 안내　　신속한 구급차 연결 서비스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거문오름

삼나무 빼곡한 길 흐~ 산신령 만나겠네

화산섬 제주도에는 모두 3백68개의 오름이 있다. 이 오름들은 저마다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 가운데서 가장 흔한 이름은 거문오름, 붉은오름, 민오름 등이다. 돌과 흙이 유난히 검은 빛깔을 띠는 거문오름, 붉은 화산토가 깔려 있는 붉은오름,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 형태의 민오름이 어딜 가나 쉽게 눈에 띈다.

제주도의 여러 거문오름 중 하나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거문오름은 단순히 검어서 거문오름으로 이름 붙여진 곳이 아니다. 이 오름의 '거문'은 신(神), 절대자를 가리키는 검, 굼, 곰, 감 등에서 기원한 말이다. 그러므로 거문오름은 신령스런 오름을 뜻한다.

거문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한라산.

선흘리의 거문오름은 여러모로 특별하다. 오름이 형성될 당시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북동쪽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가면서 20여 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주도 동북지역에 형성된 여러 용암동굴의 모태(母胎)인 셈이다.

세계적 규모의 용암동굴로 유명한 만장굴, 기어가는 뱀의 모양을 닮아 '사굴(蛇窟)'이라고도 불리는 김녕굴, 내부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한 벵뒤굴, 길이는 1백10미터에 불과한데도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 등이 환상적 광경을 연출하는 당처물동굴, 용암동굴이면서도 석회동굴의 특징을 갖춘 용천동굴 등이 모두 거문오름에서 흘러내린 용암에 의해 형성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한다. 독특한 구조와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과 함께 200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됐다.

거문오름은 제주 오름만의 독특한 특성을 두루 갖췄다. 북동쪽이 터진 말굽형 오름이고, 굼부리(분화구) 내부는 분지 형태를 이룬다. 또한 새끼오름인 알봉이 있고, 뜨거운 용암이 바다쪽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용암 유출로와 크고 작은 자연동굴들도 형성돼 있다. 거문오름은 '산 자의 삶터, 죽은 자의 쉼터'라는 제주 오름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옛날에 주민들이 거주하던 움막터, 그리고 종가시나무와 붉가시나무 등으로 숯을 굽던 숯가마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명당으로 이름난 이 오름의 산기슭에는 오름 언저리에서 태어나 오름에 깃들여 살다가 일생을 마친 토박이들의 무덤도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다.

맑은 날은 성산일출봉 · 우도까지 한눈에

깊이가 1백8미터에 이른다는 거문오름의 분화구는 '선흘곶'이라는 곶자왈을 이룬다. 곶자왈이란 용암이 흘러간 곳에 나무와 각종 덩굴식물이 원시림처럼 얽혀 있는 숲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다. 제주도의 허파 같은 구실을 하는 곶자왈은 흙 대신 크고 작은 화산석이 쌓여 있어 물맛 깔끔한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거문오름은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이자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은 현재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평일 1백명, 주말과 휴일 2백명 내에서 사전 예약한 사람은 생태해설가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거문오름의 탐방이 허용된다.

거문오름은 현재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거문오름 트레킹코스가 개방된 뒤로 거문오름의 탐방객 수는 평일 1백명, 주말과 휴일 2백명으로 제한됐다. 이 인원 내에서 사전 예약한 사람은 생태해설가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거문오름의 탐방이 허용된다. 필자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의 첫 주말에 길이 5킬로미터의 거문오름 트레킹코스(A코스)를 직접 걸어보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거문오름 트레킹코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거문오름 탐방안내소(064-784-0456)부터 들러야 한다. 사전 예약한 사람들도 이곳에서 탐방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어야 거문오름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다.

출발 예정 시간을 40분가량 앞둔 오전 9시 20분경 탐방안내소에 도착했다. 탐방안내소 앞의 좁은 마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찾아온 탐방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유치원생과 부모, 유치원 교사들로 구성된 팀에 섞여 거문오름 트레킹에 나섰다. 탐방안내소를 출발한 지 10여 분 만에 거문오름 정상으로 향하는 삼나무숲길에 들어섰다. 빼곡하게 들어찬 삼나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 향기를 맡으며 얼마쯤 걷다 보니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거문오름 정상의 높이는 해발 4백56미터다. 하지만 출발지가 해발 4백미터대에 자리해 비고(比高), 즉 실제 오르는 높이는 1백12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삼나무숲길은 유치원생들조차도 큰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다. 사방으로 시야가 훤히 트인 거문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머리에 늘 구름 띠가 걸려 있는 한라산 정상뿐만 아니라 성산일출봉, 우도까지도 한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각양각색 나무들이 열대우림처럼 촘촘히 들어찬 숲은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초저녁의 숲처럼 어둑했다. '천연 에어컨'으로 불리는 풍혈(風穴) 부근을 지날 때는 온몸을 휘감은 냉기에 갑자기 소름이 돋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가 찾아간 날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데다 아래의 분화구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안개 때문에 조망이 매우 답답했다. 인공조림된 삼나무숲과 천연의 곶자왈 원시림이 아름답게 조화됐다는 거문오름 굼부리를 내려다보기 위해 한참 동안 정상의 전망대에서 서성거렸지만 자욱한 안개는 끝내 스러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간간이 제법 굵은 빗발까지 떨어지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정상에서의 조망을 포기하고 근래 설치된 나무데크 탐방로를 따라 굼부리 안으로 내려갔다. 각양각색 나무들이 열대우림처럼 촘촘히 들어찬 숲은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초저녁의 숲처럼 어둑했다. 1970년대 중반에 인공조림됐다는 삼나무숲도 지나고, 식나무와 붓순나무가 자라는 상록활엽수림 지대도 통과했다. 그중 높이 3~5미터의 상록관목인 붓순나무는 연기가 별로 나지 않아 제주 4·3사건 당시 숨어 살던 주민들이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던 나무라고 한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제주도 전역을 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일대격전을 준비했던 일제는 거문오름의 굼부리 안에도 엄청난 규모의 갱도진지를 직접 구축했다고 한다. 울창한 숲에 뒤덮여 있어 미군 정찰기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이곳은 당시 일본군 108여단이 구축한 갱도진지 10여 개와 병참도로가 남아 있다. 하지만 나무가 워낙 무성해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거문오름의 굼부리 밖은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했지만, 굼부리 안의 숲길은 의외로 상쾌하고 시원했다. '천연 에어컨'으로 불리는 풍혈(風穴) 부근을 지날 때는 온몸을 휘감은 냉기에 갑자기 소름이 돋기도 했다. 여름에는 냉기를, 겨울에는 온기를 내뿜는다는 풍혈을 지날 무렵부터 굵은 빗방울이 나뭇잎을 연신 때렸다. 화산 폭발 당시 날아온 용암이 기존의 바위에 붙어

한낮에도 어둑할 정도로 나무와 덩굴식물이 빼곡한 거문오름 굼부리(분화구) 안의 숲길.

서 생겨났다는 '화산탄'이 있는 곳에서부터는 아예 장대비가 쏟아졌다. 차츰 날씨가 갤 것이라는 예보만 믿고 판초우의나 우산을 미처 챙겨오지 않은 상태라,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가 비에 젖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모자로 카메라를 덮은 채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다. 원체 경황이 없다 보니 분화구 탐방로가 끝날 즈음에 만나는 수직동굴도 눈여겨보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거문오름 트레킹코스를 여유 있고 꼼꼼하게 섭렵하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의 어떤 오름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곳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8월 16일까지 이어지는 국제트레킹 행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그 숲길을 걷기 위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지도 모르겠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만장굴 입구 삼거리에서 만장굴 사이의 아름다운 협죽도길.

여행 정보

200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행사기간에는 기존의 A코스를 5.6킬로미터에서 8킬로미터로 연장한 '태극길'과 지난해 국제트레킹 기간에 개발했다가 폐쇄된 '용암길'(B코스)이 모두 개방된다. 더욱이 태극길의 9개 봉우리를 연결하는 능선길은 해설사의 동행 없이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 하지만 태극길의 굼부리(분화구) 구간은 해설사와 동행해야 하고, 약 5킬로미터의 용암길은 안전요원과 함께 탐방해야 한다. 국제트레킹 기간에는 사전예약제도 실시하지 않고, 탐방객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오전 8시~오후 1시 사이에 출발지인 탐방안내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탐방이 허용된다. 그리고 용암길 종점과 탐방안내소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거문오름이 자리한 선흘리에서는 제주도 최대 용암동굴이자 협죽도길이 아름다운 만장굴, 아담한 백사장과 비췻빛 바다가 인상적인 김녕해수욕장이 자동차로 10~20분 거리에 있다.

숙박 조천읍 선흘리에는 선린지리조트(064-784-8666), 황토마을(011-511-6600) 등 펜션이 여럿 있다. 그중 선린지리조트는 약 10만 제곱미터(3만여 평)의 넓은 터에 유럽풍 펜션, 숲 속 통나무집, 별장형 숙소, 단체 숙박동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숙박시설이 들어선 휴양 리조트다.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잔디구장, 후박나무 산책로, 자연휴양림, 연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뿐 아니라 단체 숙소로도 이용하기에 좋다.

맛집 만장굴 주차장 옆에 자리한 만장굴향토식당(064-783-4507)은 갈치국, 성게국, 해물뚝배기 등의 제주 향토음식을 내놓는데, 특히 꾸덕꾸덕하게 말린 우럭을 양념해서 쪄낸 우럭찜이 일품이다. 거문오름 어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와산리에는 보리쌈밥, 뽕잎전, 해물전 등을 맛볼 수 있고 숙박도 가능한 길섶나그네(064-782-5971)가 있다.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덕인당(064-783-6153)은 제주도산 보리와 팥으로 만든 보리빵과 향긋한 쑥으로 만든 쑥찐빵이 맛있는 집이다. 설탕을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을 맞춘다고 한다.

만장굴향토식당의 우럭찜.

가는 길 제주공항 → 월성사거리(우회전) → 오라오거리(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 국립박물관 사거리(우회전, 97번 지방도) → 선흘입구(좌회전) → 선흘2리(거문오름 탐방안내소)

동아DB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백 미터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자 포효하는 박태환. 펠프스와 재대결에 나선다.

마린보이 박태환 vs 황제 펠프스 로마 대격돌

한국 수영, 세계와 어깨를 겨룬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수영황제 펠프스의 맞대결이 수영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수영장을 뜨겁게 달궜던 두 사람이 2009 베를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번 자존심을 건 수중 대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박태환 vs 마이클 펠프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수영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대결구도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경영 7월 26일~8월 3일 · 한국시간)를 앞두고 '마린보이' 박태환(20 · 단국대)과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4 · 미국)의 맞대결이 수영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두 사람은 자유형 2백 미터에서 다시 한번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그동안 올림픽에서는 결선 8강에만 올라도 빅뉴스였던 '수영의 변방' 한국은 박태환의 등장으로 세계 수영의 중심에 진입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에서 박태환이 한국 수영 사상 처음으로 자유형 4백 미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박태환은 자유형 2백 미터에서 펠프스와 맞대결을 펼쳐 1분44초85의 아시아 기록을 세워 1분42초96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한 펠프스에 이어 은메달까지 획득했다. 한국 수영이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박태환은 한국 수영의 구세주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현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 선수가 월계관을 쓰면서 '몬주익의 영웅'으로 불렸듯 박태환은 '베이징의 영웅'이 됐다. 박태환의 금메달로 한국에 '수영 붐'까지 일게 됐다.

펠프스는 미국의 영웅이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7개의 세계기록을 세우며 8관왕에 올랐다. 자유형 2백 미터(1분42초96), 접영 2백 미터(1분52초03), 개인혼영 2백 미터(1분54초23), 개인혼영 4백 미터(4분03초84), 계영 4백 미터(3분08초24), 계영 8백 미터(6분58초56), 혼계영 4백 미터(3분29초34)에서 모두 세계 기록을 세웠다. 8관왕은 1972년 뮌헨올림픽 때 '미국 수영의 전설' 마크 스피츠가 기록했던 역대 한 대회 최다 금메달인 7개를 갈아치운 것이기도 하다. 특히 펠프스는 어린 시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수영으로 극복해 미국에서는 장애를 넘어 세계를 정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최고에 오른 자는 외롭다고 했던가. 박태환과 펠프스는 올림픽이 끝난 뒤 나란히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 먼저 펠프스는 올해 2월 영국의 한 주간지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진이 게재돼 전 세계 수영팬들을 경악케 했다. 펠프스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마리화나를 흡입했다고 시인했고 결국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징계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펠프스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졌던 그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닮은꼴 스타 박태환과 펠프스

박태환은 펠프스와는 다른 경우다. 올림픽 금메달에 취해 다소 훈련을 등한시한 것이다. 스타는 자신에게 따라오는 인기를 누릴 특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스타로서 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

박태환은 전담팀을 구성해 올해 1월과 4월 미국의 서던캘리포니아대(USC)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올림픽 금메달을 만든 노민상 감독이 버티고 있는 대표팀이 상시 훈련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전담팀을 구성한 것에 대해 국내 수영계에서는 걱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개인 중심의 전담팀에서 훈련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올림픽을 앞두고 박태환은 전담팀과 촌외 훈련을 하다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당시에는 올림픽을 5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표팀에 복귀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해 노 감독은 송홍선 체육과학연구원 박사와 함께 '지옥 훈련'을 시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수렁에 빠질 듯했던 펠프스는 바로 훈련에 매진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자유형 1백 미터에 이어 7월 10일 미국선수권 접영 1백 미터에서 연달아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세운 1백 미터 신기록 50초22는 2005년 7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언 크로커(미국)가 세운 종전 기록 50초40을 0.18초 앞당긴 것이다.

최상의 컨디션인 펠프스는 5개 종목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며 개인 통산 33개째 세계 기록을 수립해 스피츠의 현역 시절 세계 신기록 수와 타이를 이뤘다. 이런 상승세를 볼 때 펠프스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하는 자유형 2백 미터, 접영 1백 미터와 2백 미터, 계영 4백 미터와 8백 미터, 혼계영 4백 미터 등 6개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이 유력시되고 있다.

반면 박태환은 최근 기록이 저조하다. 5월 미국 전지훈련 막판에 참가한 재닛 에번스 대회에서 자유형 1천5백 미터에서는 자신의 최고 기록(14분55초03)에 못 미친 14분57초06을 기록했다.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려면 14분40초대에 들어야 한다. 또 주 종목인 자유형 4백 미터에서는 3분52초54로 올림픽 금메달 기록(3분41초85)에 10초 이상 뒤졌고 자유형 2백 미터에서도 1분47초43으로 역시 지난해 올림픽 기록(1분44초85)에 2초 이상 차이가 났다. 그만큼 훈련이 덜 된 것이다.

노민상 대표팀 감독은 박태환이 지난 5월 말 대표팀에 합류하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내겠다"며 박태환이 훈련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당시 시점에서 90퍼센트 이상 몸 상태를 올려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박태환은 노민상 감독의 조련에 따라 막바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다. 노 감독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내겠다. 태환이가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팬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행히 박태환은 노 감독의 조련에 따라 막바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다. 노 감독은 "태환이가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팬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박태환은 7월 26일 자유형 4백 미터 예선을 시작으로 7월 27일 자유형 2백 미터 예선, 8월 1일 1천5백 미터 예선에 출전한다. 펠프스와의 '운명의 맞대결'은 자유형 2백 미터 예선이나 2백 미터 준결승(7월 28일) 혹은 결승(7월 29일)이 될 전망이다. G

글 · 양종구(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동아DB

'마린보이' 박태환은 미국의 '수영황제' 펠프스(오른쪽)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거듭나고 있다.

‘제작비 0원’ 영화 한 편 찍어볼까요

5톤 트럭 몰고 전국 일주… ‘마을영화’ 제작 신지승·이은경 부부

돈 한 푼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농촌마을 주민들의 진솔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신지승·이은경 부부의 영화 만들기.

신지승(46) 감독과 이은경(40) PD는 10년 넘게 ‘마을영화’를 만들고 있는 부부 영화인이다. 연출은 신 씨가, 제작은 아내 이 씨가 맡는다. 배우는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배우일 뿐 아니라 때론 영화감독이 되기도 하고, 손이 모자라면 촬영 스태프로 일손을 돕기도 한다. 연기를 배운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영화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촬영하는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마을영화의 개념을 세우고 활동하기까지 부부는 지난 10년간 고군분투했다. 영화사와 드라마 프로덕션에서 10여 년간 연출부 생활을 하다 한계를 느낀 남편 신 씨는 부인과 함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람들 제공

마을 주민들은 배우, 감독, 스태프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마을영화를 만든다.

께 1999년 경기도 양평에 터를 잡았다. 연고도 없는 곳이라 처음 몇 년 간은 힘들었지만 부부는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영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바로 한 명 한 명 개인의 소망을 담은 돌탑처럼 함께 만드는 영화, 이것이 마을영화의 시초였다.

2003년 두 사람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5톤 트럭을 마련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다. 양평, 안양, 공주, 통영, 무안, 부산 등을 다니며 바로 '그곳'에서만 찍을 수 있는 마을영화를 만들었다. 예정된 시나리오도 없이 실제 마을 사람들의 개성과 지역성에 기반을 둔 이야기를 기본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60편의 마을 영화들은 '보통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과 복수, 살인 등 자극적인 소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빚어낸 평범한 일상으로 가득차 있다. 고추 값 1백원 차이로 서로 싸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고추전쟁〉, 지체 장애인과 자원봉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포도밭의 아이들〉, 농촌 마을에 놀러온 도시 아이들을 구경하는 시골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우리 마을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등 마을의 단면이 담긴 모든 것들이 소재가 돼 영화로 만들어졌다.

평범한 농촌 일상이 소재… 요즘엔 제작 의뢰도 들어와

그럼 마을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되는 걸까. 우선 마을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야기가 있을 만한 적당한 영화 촬영지를 고른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영화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 처음엔 이 과정에서 "뭘 팔러 왔느냐"고 오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입소문이 나서 '우리 마을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도 많이 들어온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이때부터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영화 소재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전체 주제를 잡아나가면서 본격적인 촬영을 하고, 편집 등 마무리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이 보통 한두 달 걸린다고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이라이트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달빛영화제'.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영화 시사회를 즐기면서 하나의 축제로 마무리짓는다.

부부는 지금 이주여성들의 일상을 담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도 홍천, 인제 냇강마을, 경기 양평 연수리마을에서 이주여성들과 영화를 찍고 있다. 신 씨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의 얘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한국 농촌 적응기를 그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농촌마을 사람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화만 만들다 보니 〈집으로〉나 〈워낭소리〉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을 때, 주변 지인들은 이게 이들의 작품으로 오인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부부는 마을영화는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와도 구별된다고 말한다.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는 적은 돈으로 만들지만 극장에 상영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마을영화는 극장 개봉을 위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또한 마을영화는 감독 개인 중심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주변 이웃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인 거죠."

전국 각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영화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듯싶다. 부부는 빙그레 웃으며 마을 주민 외에도 신지승 감독의 영화 사이트(www.changc.com)를 통해, 혹은 그가 쓴 책 〈떠돌이 감독의 돌로 영화 만들기〉를 읽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때 마을영화를 만들었던 아이가 대학생이 돼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들의 영화 만들기는 외롭지 않다.

신 씨는 "한국 사람들의 살아 숨쉬는 다양하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담아 콘텐츠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로벌 문화산업 시대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게 지역문화이고,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마을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마을영화를 콘텐츠로 삼아 세계 마을영화 페스티벌 붐을 일으키는 게 꿈이다. 그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올해 홍천, 양평, 인제 등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국 마을영화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영국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농촌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을영화를 통해 삶의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사진 · 조영철 기자

신지승 · 이은경 부부는 전국 각지 마을 사람들의 실제 삶을 소재로 한 마을영화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킨다.

〈한국 현대사진 대표작가 10 : 2009 오디세이〉展

포스트 밀레니엄… 10년의 시간을 찍다

사진은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시각 매체로 우뚝 섰다. 누구나 손쉽게 폰카(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와 디카(디지털카메라)를 놀려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의미를 부여한다. 사진 찍기와 나누기는 이처럼 21세기 사람들의 일상 놀이가 됐다. 이렇듯 사진과 이미지가 우리 삶을 파고들어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진예술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현대사진 대표작가 10 : 2009 오디세이'전은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온 한국 현대사진의 면면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소외된 계층의 삶과 일상을 담아내는 주명덕, 내면의식 속에 잠재한 꿈과 환상, 초현실적인 경험에서 얻은 에너지를 절제되고 섬세한 터치로 드러내는 구본창을 만날 수 있다. 또 다큐멘터리 사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 이갑철, 목탄으로 그려진 풍경화 같은 흑백사진을 찍는 민병헌 등 독자적인 작품성 구축과 더불어 동시에 대중과의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작가 9명의 작품 1백여 점으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은 8월 1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8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5천원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문의 · 02-2000-6474

2

이갑철, 풍어제

2배 더 유익하게 즐겨요!

마스터 클래스

전시 기간 중 참여 작가들이 사진예술을 강의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이갑철(7월 25일), 오형근(8월 1일), 고명근(8월 8일) 작가가 각각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예약을 받거나 현장 접수한다.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며, 참가비는 입장권과 유인물을 포함해 3만원이다. 카메라는 꼭 지참해야 한다.

카메라 루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진 아카데미. 어린이 전시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오디세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카메라 사용법을 배우는 '카메라 똑딱똑딱' 2가지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7월 24일부터 매주 금·토·일요일에 진행되며, 참여하려면 전화로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한다. '어린이 오디세이'는 오전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1만원, '카메라 똑딱똑딱'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도슨트 오디세이

관객이 전시작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해설사, 도슨트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 전시 기간 내내 매일 운영되며, 오후 2시와 5시 모두 2회 진행된다. 도슨트가 진행하는 전시 투어 '데일리 오디세이'와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스페셜 오디세이' 2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1

In the Beginning, 구본창

3

스노우랜드 시리즈, 민병헌

1 작가 구본창의 작품 중 오랫동안 주목받으며 사랑받고 있는 'In the Beginning' 시리즈. 사진을 찍고 그것을 실로 꿴 후 다시 프린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한다. 사람의 몸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도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 In the Beginning 10-3, 1995~96, 175×490cm, 젤라틴 실버 프린트, 실

2 다큐멘터리 작가 이갑철의 '충돌과 반동' 시리즈 중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냈다. 풍어제, 1990, 97×137.5cm, 울트라 크롬 프린트

3 '눈의 직관'에만 의지해 중간 톤의 밋밋한 사진을 찍어냈다. 아날로그 흑백사진을 토대로 나온 회색빛 사진은 마치 한국 산수화 같은 느낌을 준다. SL049 BHM 2006, 2006, 105 x 125cm, 젤라틴 실버 프린트

조영철 기자

〈2009 오디세이〉 전시장 내부.

초보 관객 위한 해설이 있는 친절한 공연

오페라 보러 갈까, 국악 들으러 갈까~

국립오페라단 마이 퍼스트 오페라 시리즈 '나비부인'

일시	7월 25일(토)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문의	02-586-5282 www.nationalopera.org

'마이 퍼스트 오페라'는 초보 관객들도 부담 없이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국립오페라단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오페라 입문 시리즈다. 국립오페라단은 2006년 푸치니의 '라보엠'을 시작으로 2007년 '카르멘', 2008년 '카벨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무대에 올렸으며 올해 네 번째 무대에서는 자코모 푸치니의 '나비부인'을 공연한다.

'나비부인'은 미국 작가 존 루터 롱의 동명소설(1897)을 1900년에 D. 벨라스코가 희곡화해 뉴욕에서 초연했고,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가 이를 이탈리아어 대본으로 만들었다. 푸치니는 연극을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오페라로 제작했다. 이렇게 해서 2막 3장의 오페라 '나비부인'은 1904년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상연된다.

하지만 초연은 실패로 끝나고 당시 '라보엠' '토스카'로 승승장구하던 푸치니는 큰 좌절을 맛본다. 이에 푸치니는 일본 전통의상, 배경, 소품 등을 수정하고 곡도 관객 취향에 맞도록 바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나비부인'의 성공에는 20세기 초반 유럽인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 오페라는 '나비'라는 애칭을 가진 게이샤 초초상과 미군 장교 핀커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배경은 19세기 말 일본 나가사키. 핀커턴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게이샤 초초상(나비부인)과 결혼한다. 그러고는 그녀와 아이에게 울새가 집 지을 때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난다. 3년 뒤 핀커턴이 미국인 아내를 데리고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나비부인이 자결하고 만다는 비극적인 줄거리다.

연주는 김주현 씨가 지휘하는 코리안심포니가 맡는다. 초초상 역은 이지은과 이상은이, 핀커턴 역은 김도형과 최성수가 번갈아가며 선보인다. 연출자 이나라 씨는 "배우들이 '어떤 갠 날(Un bel di ved'remo) 등 주옥같은 아리아들을 선사할 것"이라며 "한여름 밤에 멋진 추억을 만들어줄, 기대해도 좋은 공연"이라고 소개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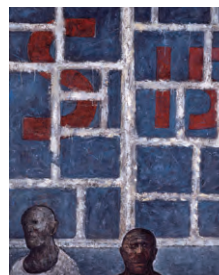
창경궁의 아침 '국악의 아침을 거닐다'

일시	7월 25일, 8월 15일, 22일, 29일(토) 오전 7시 30분~8시 40분
장소	창경궁
관람료	무료(선착순 예약 4백명)
문의	02-580-3300 www.ncktpa.go.kr

토요일 이른 아침 고즈넉한 창경궁에서 전통음악의 고아한 정신을 담은 국악무대가 펼쳐진다. 숙명여대 송혜진 교수의 해설과 함께 춘앵전, 시조, 별곡 등 풍류음악이 도심을 향해 울려 퍼진다. 정통 국악의 멋과 운치를 맛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약 20명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원이 연주를 맡는다. 공연 관람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매회 4백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아리랑 꽃씨, 아시아 이주 작가' 展

일시	9월 29일(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월요일은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2전시실
관람료	3천원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척박한 땅에서도 당당히 삶의 터전을 일궈낸 한인 작가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전시다. 작품 시기와 작가의 범위는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이주자와 그 후손들로 한정했다. 전시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일본 주요 미술기관의 한인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이 소장한 서양화가 조양규의 작품을 비롯해 한국인임을 커밍아웃한다카야마 노보루와 3세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사랑을 충전하세요

글과 그림 · 최영순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빈털터리나 마찬가지야. 꿈도, 이야기도, 아무 것도 없지.
–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중에서

전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 글로벌 공조와 협력에 있다

다보스 리포트, 위기 이후 세계

박봉권·김규식·이덕주 지음 **박재현** 기획·감수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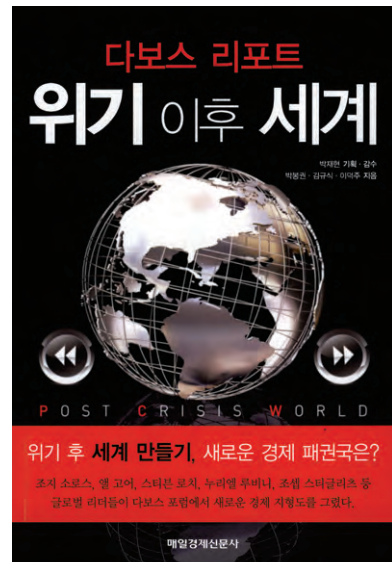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V자나 U자 형태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져 심각한 불황을 겪을까. 좌초 위기에 빠진 미국의 신자유주의호(號)는 다시 정상적인 항해에 나설 수 있을까. 글로벌 경제위기 후 세계 경제지도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주제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렸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라고도 불리는 다보스포럼은 매년 각 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약 1주일 동안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이는 국제적인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탈(脫)위기 후 세계 질서 개편'이란 주제 아래 지구촌이 처한 경제위기와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보스 리포트, 위기 이후 세계〉는 글로벌 리더 2천5백명이 난상토론을 벌인 다보스포럼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이다.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블랙스완〉 저자,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전 세계 석학,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의 혜안이 담겨 있다.

이들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는 한동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터널의 끝이 보이겠지만 터널의 길이조차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의 생존게임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노사관계 재정립해야 경제위기 탈출"

책에서는 특히 시장의 자정기능에 대한 과신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했다는 비난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큰 국가론'이 힘을 얻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위기 후 새롭게 나타날 세계질서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주도하기는 힘들다고 결론내리고, 다른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주의적 시스템 아래에서 세계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흥개도국과 선진국으로 구성된 주요 20개국 회의인 G20이 차세대 신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 200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
> 전 세계 96개국 2천5백여 명의
> 글로벌 리더들이 모였다.
> L자형 장기 침체, 파생상품 부실 등
>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데
> 따른 긴박함의 결과였다.
> 이들이 말하는 금융위기 해법과
> 그 이후 열릴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현 경제위기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극복 후 새롭게 나타날 신세계질서의 모습도 바로 다자주의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책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 인식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대다수 석학들은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의 터널 속으로 막 발을 들여놓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연구개발(R&D), 혁신(Innovation), 세계화(Globalization) 등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사관계가 취약하다. 인적자원 활용 등을 통해 더욱 글로벌화한 기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한국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길 기대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찾아올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성을 위해 혁신적인 대응전략을 그려둘 필요가 있다. 세계질서가 변하는 방향을 모르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올 여름 〈다보스 리포트, 위기 이후 세계〉를 읽으며 새롭게 탄생할 글로벌 경제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지난 1월 시점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여전히 유효하다. G 글·김민지 기자

높女라! 취업의 꿈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 새직장 1학년!

그동안 직장은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교육도 받고,
새 직장까지 얻었답니다. 이제 1학년의 마음가짐으로
직장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 할 겁니다.

높女라! 취업의 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는 대한민국 여성 취업의
믿음직한 도우미! 상담에서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대표전화 **1544-1199** 일을 구해 드립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